

「신나게 企業하는 忠南宣言」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토론회

■ 일시 : 2003년 1월 28일(화) 14:00~17:00

■ 장소 : 충청남도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세미나 일정

- 등록 및 안내 13:30 ~14:00

- 이미지 영상물 상영 14:00 ~14:05

- 개 회 식 14:05 ~15:20
 - 국민의례
 - 기관·공무원 표창
 - 인사말씀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 축 사 이형집 기업인연합회장
 - 추진상황 보고 송석두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장
 - 수범사례발표 고영세 예산군 지역경제과장
 - 정대식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이장
 - 조진영 (주) 중외 건설본부장

- 휴 식 15:20 ~15:30

- 주제발표 15:30 ~16:00
 - 제1주제
 -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추진상황 평가와 향후과제
 - 한무호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 제2주제
 - 충청남도 산업발전여건과 기업유치전략
 - 김인중 (산업입지정보센터 소장)

- 종합토론 16:00 ~17:00
 - 좌 장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토 론 자 송석두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장)
 -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교수)
 - 윤 찬 (세광섬유 대표)
 - 정동창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소장)
 - 정해순 (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장)

- 폐 회

人 事 말 씀

민선 3기 자치도정의 2차년도를 열어가면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의 더욱 활력있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이 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토론회에도 참석해 주신 유관 기관과 경제 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월,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 큰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의지를 對 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국가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시다만, 우리는 행정과 기업,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우리 지역에 입주하거나 창업한 기업이 2001년보다 36%가 늘어난 860개에 이를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 가동률도 89.7%에서 94.2%로 증가하였고 수출은 33%가 늘어난 155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보람있었던 것은 도내 기업들이 우리 道의 기업정책을 신뢰하고 새로운 의욕과 활기를 찾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우리 道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道로 선정되는 가슴 뿌듯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업인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직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공장용지와 같은 기업 인프라나 각종 제도 개선도 충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밑거름 삼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2의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 등 투입요소 확보와 인프라 확충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국정의 실천 과제로 선정한 차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 우리 道의 여건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금년 안에는 경부고속전철이 개통됨으로써 물류 기반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아산만권 신도시 건설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의 가시화로 인한 역동적 분위기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나 도민들의 인식이 기업인을 신뢰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親기업의식 함양을 통한 사회 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모든 기업 활동에 더 큰 신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국민 경제의 주춧돌인 우리 기업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를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내 기업의 번창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3년 1월 28일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祝 辭

오늘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심 대 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시군 관계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과 새 해에도 뜻하시는 바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도내 각급 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1월 23일 기업하기 좋은 道로 만들기 위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선포식과 함께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 추진해 왔던점은우리지역 기업활성화에 획기적인 활력소를 가져오게 된 좋은 시책이었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는 열악한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자 5대과제 118개 시책으로 나누어서 기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애로 해소책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全 道政을 집주하여 계획된 시책을 차질없는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토탈서비스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기업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한해 우리 충청남도에 창업 또는 입주한 기업이 86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으로 기업환경이 조성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선포 1주년 정책토론회는 우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부담없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忠南道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에 마지않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부를 주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國內적으로 월드컵

4강신화 달성과 대한민국 이미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국부창출 효과를 거두는가 하면 道內적으로도 150만명이라는 국내외 인파가 다녀간 안면도 꽃박람회 성공적 개최로 우리 충남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도가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각국을 대상으로 기업제품의 판로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전개 도내 기업들의 수출 활력화와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세계를 제패했던 서양문명의 시대가 점차 저물어가고 새로운 태평양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우리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와 「하면된다」는 굳은 의지와 추진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굳은 의지와 추진력은 지난해 월드컵기간중 우리국민들이 보여준 국민적 결집력과 4강신화 달성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인은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새 바람, 새 물결이 몰려오는 서해안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충남에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도를 우리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축하와 아울러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003년 1월 28일

충남 기업인연합회장 이 형 집

제 1 주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추진상황 평가와 향후과제

한무호(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목 차

- I. 서 론
- II. 시책의 추진과정과 내용
- III. 시책에 대한 기업만족도 분석
- IV.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추진 과제

I. 서 론

지금까지 추진된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한 공간적 산업입지정책이 그 근간을 이뤄왔다¹⁾. 반면 지역내 경제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경제정책은 매우 미흡했거나 전무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²⁾. 왜냐하면 그 동안 추진된 지역경제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한 물리적 생산기반조성이거나 국가 전체적인 산업진흥과 국토개발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역(지역민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 의한 자생적 지역경제정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정책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하향적 정책기반구축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스스로의 정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율권의 확보(지방분권)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욕구를 지방의 시각에서 지방의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착근과 자생적(내발적) 지역발전³⁾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1) 우리나라 지역경제정책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활동의 효율화와 국가의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인구 및 산업의 지역간 편중으로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지역산업의 침체 내지 공동화는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발전과정	· 자립경제 기반구축 및 산업구조 근대화	· 중화학공업기반 확충을 위한 임해공단 조성	· 공업의 지방분산 및 중소공단 조성	· 산업의 첨단화, 복합화를 통한 산업발전 도약
정책목표	· 수출산업단지 조성 · 경공업 입지	· 중화학공업 육성 · 산업의 적정 배치	· 인구의 지방정착 · 개발가능성의 확대	· 지역간 균형발전 · 벤처기업 창업 촉진
입지정책개요	· 일부 대도시지역에 개별입지 형태로 공장집중 · 국가기간산업 육성과 함께 계획입지 형태의 공업단지 조성	· 대도시공업분산을 위한 지방공업단지 개발 · 중화학공업화 추진	· 중소공업단지의 지방분산배치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수도권 개발규제 · 농공단지 조성	·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 지식집약산업의 기반구축 · 서비스화 중심의 Software형 산업 육성
정책사례	· 울산공업단지 조성 · 수출공단조성	· 대규모 공단 조성 · 수출자유지역	· 서해안 대규모 공단 · 지방공단, 농공단지 활성화	· 첨단산업단지 조성 · 테크노파크 조성

- 2) 1960년 이후 30년 동안 추진된 지역정책에서 과연 지방정책이 존재했었는가? 라고 반문할 정도이다.(최상철, 한국적 지역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제3권, 1991.6. pp.104~106. 참조)
- 3) 내발적 발전이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중앙정부의 사업이나 외부 대기업유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부의 기술·산업·문화를 토대로 지역산업연관이 존재하는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학습하고 계획하고 경영함으로써

지방화, 개방화 그리고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새로운 경쟁체제로의 국제 경제질서와 개방경제체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역경제정책의 전반적인 틀도 바뀌어야 한다. 지역 내적으로 지역특성과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제의 성장과 지역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개방경제에 적극 적응하는 지역의 국제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1년 동안 지역기업 활동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극적인 기업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충청남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기업하기 좋은 충남」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의 효율적인 지역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II. 시책의 추진과정과 내용

1. 시책의 추진과정

세계 각국의 국내외 기업들은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속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유리한 투자환경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세계 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2002년 1월 23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조성사업을 선포하고 각종 규제완화, 공무원의 행태와 관행개선,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부담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자생적인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2. 시책의 주요내용

충청남도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과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5개 분야, 118개의 실천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창업 및 공장설립 분야	①창업공장설립 승인기간 단축 ②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단 설립·운영 ③공장설립 추천지역 조사 정보제공 ④창업공장설립 민원 일괄처리단 구성·운영
환경분야	①환경관리 중복 지도·점검 일소 ②재활용 인증제품 구매제도 활성화 ③환경관련 법령해석상 혼선방지 ④환경분야의 법정일지 작성 최소화 ⑤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분야 검토기준 완화
소방분야	①기업체 소방교육 지원 ②방화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건의
산업입지 분야	①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②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범위 확대 ③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차등화
농림분야	①대체농지 조성비 납부제도 불합리 개선 ②대체농지조성비 부과기준 완화 ③지자체 농지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권한 확대 ④임목축적에 의한 산림형질변경기준 불합리 개선
노동인력분야	①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②노동쟁의 기간중 대체근로자 자격 명문화 ③기업체 작업환경 측정주기 완화
금융분야	①금융기관 대출시 과도한 담보요구 금지 ②부분보증 대출시 담보요구 관행개선 ③회사채 신용평가 유효기간 연장
세제지원분야	①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등 금지 ②경매공장을 취득한 기업의 창업 인정 ③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④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제도 개선
기타 분야	①대전에 집중된 기업교육 시군 분산 개최 ②중요한 법이나 제도 등 변경사항 홍보 ③기업체 단순신고사항 처리절차 간소화 ④원산지 표시관리 처분권한 일원화 ⑤관주도행사에 기업인 참석지양 ⑥법규준수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2) 공무원 행태와 관행개선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공무원 교육강화를 통한 기업마인드 제고	①지방공무원교육원 중소기업인 특강 운영 ②기업민원담당자 교육과정 신설 ③기업민원담당공무원 합동연찬회 개최 ④시군 순회특별교육 실시
경제담당공무원 선진전문 기회부여	①경제공무원 우수기업 견학 ②기업민원담당공무원 해외 연수 실시
경제담당공무원 장기근속제 시행·사기진작	①경제담당공무원 장기근속제 시행, ②기업유치 및 해외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기타	①시군에 대한 도 감사시 감사방법 개선 ②기업인과 공무원의 합동연찬회 개최 ③기업연수 프로그램에 경제공무원 참가

3)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	①기업입주시 지역주민 환영행사 개최 ②중소기업 절세지원반 운영 ③도시군정지 기업인상설코너 신설 ④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업 우대시책 전개 ⑤기업인 민원창구 개설 ⑥노사화합 선언대회 개최 ⑦도내 농공단지 명칭변경으로 이미지 부각 ⑧ 충남기업주간행사 ⑨ 기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⑩노사분규 청정지역 만들기 운동 전개

4)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수요에 대비한 산업단지 여력 확보	①신규산업단지 조성 ②대규모 미착공 산업단지 개발 ③농공단지 신규개발
R&D 지역혁신체제 구축	①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센터 설립 ②한국전자부품연구원 분원 유치 ③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 센터 설립 ④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설립 ⑤유구 자카드직물지원센터 설립
기타	①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일제정비 ②개별입지기업 SOC선지원반 운영 ③민간개발 전문산업단지 지원

5)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자금지원	①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②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정보공유협약을 통한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③벤처, 경영안정자금의 금리1.0% 특별인하 ④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 우대지원 ⑤ 충남신용보증재단 자금 지원규모 확대
산업인력 수급체계 확립	①충남산업인력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②지역산업체 우수인력 임용후보 추천제 운영 ③인턴사원제 활성화 ④여성 유휴인력의 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 ⑤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 활성화 및 확대 설치 ⑥산업연수생 배정 확대 ⑦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⑧충남산업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⑨3D업종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⑩공공근로 인력 중소기업 지원
기술드라이브 시책전개	①산업기술진흥센터 설립 운영 ②산학연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③국책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체계 구축지원 ④해외유명규격 및 품질시스템 인증획득 확대지원 ⑤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화 및 상품화 지원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 창출	①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②벤처경영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③벤처투자재원의 지속적 확충 지원 ④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기회 제공 ⑤분야별 전문가 인력 Pool제 구축 ⑥벤처기업 신기술, 신제품 발표회 개최
판로지원	①사이버백화점 구축 운영 ②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생산업체간 간담회 운영 ③중소기업제품 디자인지원팀 구성운영 ④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강화 ⑤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입점 지원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수출지원	①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확대 ②안정적 수출활동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③서울·해외사무소를 통한 중소기업 통상활동의 체계적 지원 ④중국시장 정보지 발간 배포
외국기업 투자유치 환경 조성	①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 조성 ②외국인 투자기업 도우미 운영 ③유망투자가 초청 One for One Service 실시
경영 및 정보지원	①산업정보망 구축 운영 ②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e-mail 구축 ③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확충 ④기업애로도우미 확대 운영 ⑤기업활동 저해사범 합동단속반 운영

3. 시책의 추진내용과 성과

1) 시책의 세부 추진내용

부문	세부 추진내용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조성비 3년 동안 분할납부 보장 • 도지사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흥지역: 2천~2만 이하→3천~3만 이하 -그외지역: 6천~6만 이하→1만~10만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기업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12.31에서 2005.12.31일까지 3년 연장 • 공장설립 승인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처리 없는 공장설립: 7→5일 -의제처리 있는 공장설립: 14→10일 -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공장설립: 45→25일 • 창업승인기간 단축: 45→20일 • 기타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금지 및 법규준수 기업 인센티브 부여
공무원 행태와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 전문가 등 시군 순회 특별교육 실시 • 기업지원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제공무원 우수기업 견학 실시 • 경영마인드 함양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한 기업연수프로그램 참여 • 반려 또는 불승인된 기업민원 확인 중심의 감사방법 개선 •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인, 벤처사업가 특강 및 토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 토론회

부문	세부 추진내용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화합선언문 채택 등 노사정 화합 선언대회 개최 • 우수기업인 표창, 애로상담,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 • 여성창업강좌, 창업경진대회, 벤처프라자 등 개최지원 • 시군별 지원위원회 구성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기업과 주민간 협조체제 유지 등 역할 수행 •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농공단지 명칭변경 • 도, 시군정지에 「기업인 상설코너」 설치 운영 기여효과, 생산제품 등 홍보 • 「기업인 민원 전담창구」 개설 운영 • 중소기업 「절세지원반」 운영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의 고도화기반 구축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카드직물지원센터(02~07),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02~06), 영상미디어산업 지원센터(02~06),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03-06)설립 • 공장부지 공급여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 2개 단지 57만평 -대규모 산업단지 : 3개 단지 859만평 -농공단지 : 7개 단지 38만평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일체 정비: 12개 단지 • 개별입지기업 SOC개선 추진: 6개 시군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정보기능대학 개교: 02.3.1(5학과 280명 입학) - 공공근로인력 중소기업지원: 263개업체, 연15천명 - 외국인산업연수생 배정확대 중앙 건의사항 반영 (8만명→13만명 확대, 03년 충남도 배정인원 86.2% 증가) - 충남산업인력지원센터 설치 추진 •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선: 3,000→3,500억원 -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개선: 1,113개 업체 565억원 지원

부문	세부 추진내용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진흥센터 설립 - 산학연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14개 대학, 27개 센터, 522개 기업 - 국책연구기관과 기술협력체계 구축: 10개 업체, 연구원 1명 전담지원 - 분야별 전문인력 pool제 운영: 산학연 107개 분야, 160명 확보 •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백화점 운영 및 입점기업 확대: 109업체→213개 업체 -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생산업체간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제품 디자인지원팀 운영: 제품포장, 홍보 및 팜플렛 제작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청의 구매정보망 활용 -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호서대 등 2개소 - 중소기업무료 홈페이지 구축 지원: 125개 업체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지원 •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 13개 사업 70개 업체 - 서울·해외사무소를 통한 중소기업 통상활동의 체계적 지원 - 수출활동지원 및 애로해결 - 중국시장 정보지 정기발간: Hot-China 발간 • 경영 및 정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보망 구축 운영: 2,642업체 - 중소기업체 대표 e-mail 구축: 3,367업체 -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확충 - 기업애로 도우미 확대 운영: 1,071업체, 391명 - 기업활동 저해사항 합동 지도단속 실시 •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천안벨리 조성: 55천평 - 창업보육센터 운영: 21개 기관 313개 업체 - 벤처경영지원센터 운영 - 창업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기획제공 - 벤처기업 신기술, 신제품 발표회 개최

2) 주요 추진성과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지역경제정책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의 개선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규 기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업여건의 개선,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이전과 유치전략 등으로 신규고용 및 소득증대를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입주 지속적 증가 : 2001년 632개 업체 ⇒ 2002년 860개 업체
- 신규고용증가 : 16천명
- 소득증대 : 1,950억원
- 제조업의 생산량 증가 : 2001년 1.2% ⇒ 2002년 10.8%
- 수출증가 : 2001년 8,987백만불 ⇒ 2002년 10,837백만불
- 산업단지 가동율 : 2001년 91.0% ⇒ 2002년 94.2%
- 어음부도율 : 2001년 0.53% ⇒ 2002년 0.36%

Ⅲ. 시책에 대한 기업 만족도 분석

1. 조사개요

지난 1년 동안의 시책 추진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중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시군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기업체수에 비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시군에 배포하여 총 312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무응답 등 신뢰성이 낮은 표본을 제외한 225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순 빈도분석과 재정자립도와 각 부문별 만족도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5개의 시책부문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HP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패키지는 SPSS 10.0을 이용하였다.

2. 분석결과

1) 일반사항

가. 창업 및 이전기업의 충남입지 이유

조사기업체 225개 중 충남에서 창업한 기업은 153개 업체, 타 시도로부터 이전한 기업은 72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타 시도로부터 이전한 기업들의 지역 분포를 보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이 75.3%(경기 47.9%, 서울 21.9%, 인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전 6.8%, 충북 4.1%, 경북 2.7%, 경남 2.7%, 전남 2.7%, 전북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들의 이전 이유로는 용지확보의 용이가 25.2%, 저렴한 지가 16.5%, 노동력 확보 15.7%, 판매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12.2%로 나타났고, 충청남도에 창업한 기업들은 용지취득 용이가 22.7%, 저렴한 지가 18.8%, 지역연고 14.3%, 관련기업 접근용이 12.3%, 노동력 확보용이가 11.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 동안 추진된 수도권 규제정책 및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기업입지여건의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요소투입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4)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실증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수준에서는 서해안지역의 시·군들이 평균 14.3%의 단순시간거리가 단축되고, 서해안의 5개 시·도내의 시·군간에는 평균 17.9%의 단순시간거리가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및 서해안 5개 시·도에서 가장 단축효과가 높은 곳은 충남과 전북으로, 전국에서는 충남이 20.3%, 전북이 17.1%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의 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21.3%, 전북이 18.3%로 단축효과가 나타났다.(김정연·전영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영향권 개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3권 제3호, 2001. p. 86~89쪽 참조)

나. 기업운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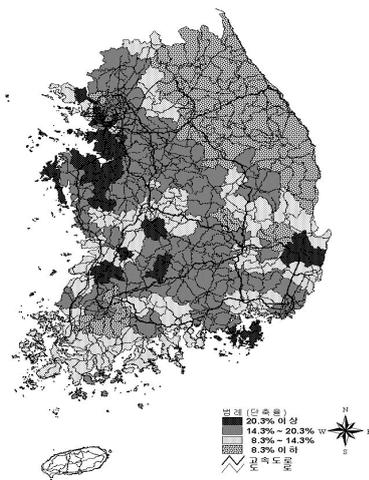
기업의 운영 여건과 관련하여 대체로 만족한다가 67.6%, 만족한다가 18.9%로 나타나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과 타 시도로부터 이전한 기업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한 기업들이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충남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지역 기업환경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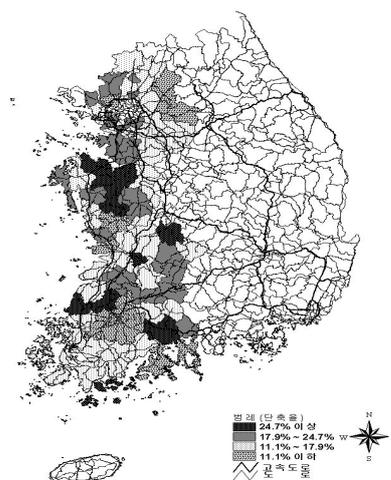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효과

구 분	시·군간 통행시간 ¹⁾		단축시간 (B-A)	단축률(%)	
	1995(A)	2010(B)			
전 국 (165시군)	인 천	26,624	23,265	3,359	12.6
	경 기	31,227	25,692	5,535	17.8
	충 남	30,734	24,287	6,447	20.3
	전 북	29,448	24,329	5,119	17.1
	전 남	37,867	33,194	4,673	12.4
	계	32,972	28,336	4,636	14.3
서 해 안 (83 시군)	인 천	16,101	13,911	2,190	13.6
	경 기	14,026	11,639	2,388	17.3
	충 남	12,433	9,691	2,742	21.3
	전 북	12,625	10,279	2,346	18.3
	전 남	17,295	14,493	2,802	16.3
	계	14,433	11,876	2,557	17.9

주: 1) 지역간 평균통행시간은 전국, 서해안의 5개 시·도, 서해안고속도로 영향권 등 각각의 분석대상 지역내의 모든 시·군간의 통행시간의 합을 해당 시·군수로 나눈 것임.



<그림 1> 전국 165개 시·군간
시간거리 단축



<그림 2> 서해안 5개 시·도내
시·군간시간거리 단축

<표-1> 기업유형과 만족도간의 교차분석

(단위 : 개, %)

구 분		기업유형		
		창업기업	이전기업	전체
만족도	만족한다	34 (22.5)	8 (11.3)	42 (18.9)
	대체로 만족한다	100 (66.2)	50 (70.4)	150 (67.6)
	불만족, 이전검토	17 (11.3)	13 (18.3)	30 (13.5)
전 체		151 (100.0)	71 (100.0)	222 (100.0)

$\chi^2=5.133$, D.F = 2, P=0.077

충청남도에서 기업활동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우수인력 확보가 42.2%, 원료공급 및 제품수요처 확보가 19.6%, 관련정보 수집이 11.9%, 기술개발여건이 8.4%로 나타나 우수인력 확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자립도와 기업운영 만족도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연관산업간의 연계성, 우수인력 확보, 제품수요처 확보, 정보의 수집 등 제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여건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기업이 입지 할 수 있는 제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다시 기업의 입지행태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 차별적인 다양한 시책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지역에 따라 인구규모와 재정규모, SOC를 포함한 기업여건, 지역경제문제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만족도 또한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적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가 되며, 지역경제를 유지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투자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재정자립도와 기업 만족도간 교차분석을 위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표준화한 결과 아산시, 당진군, 천안시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논산시, 예산군, 태안군, 연기군, 서산시가 중간 지역으로, 청양군, 부여군,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공주시, 서천군은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표-2> 재정자립도와 만족도간의 교차분석

(단위 : 개, %)

구 분		재정자립도			
		높은 지역 (25% 이하)	중간 지역 (25% ~38%)	낮은 지역 (38% 이하)	전체
만족도	만족한다	11 (13.9)	24 (31.6)	7 (10.4)	42 (18.9)
	대체로 만족한다	58 (73.4)	46 (60.5)	46 (68.7)	150 (67.6)
	불만족, 이전검토	10 (12.7)	6 (7.9)	14 (20.9)	30 (13.5)
	전체	79 (100.0)	76 (100.0)	67 (100.0)	222 (100.0)

$\chi^2=15.511$, D.F =4, P=0.004

2) 부문별 만족도 분석

부문별 추진시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HP기법을 사용하였다⁶⁾.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체들이 느끼는 분야별 중요도는 인프라 확충(23.7%), 중소·벤처기업지원 강화(22.1%), 규제완화(20.9%), 공무원 행태와 관행 개선(17.6%),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15.7%) 순으로 나타났다⁷⁾.

<표-3> 분야별 중요도에 대한 AHP분석 결과

구 분	규제완화	공무원행태	기업인사회	인프라확충	중소벤처기업	중요도
규제완화	1	1.218	1.150	0.892	1.048	0.209
공무원행태	0.821	1	1.165	0.752	0.768	0.176
기업인사회	0.870	0.859	1	0.633	0.672	0.157
인프라확충	1.121	1.331	1.579	1	1.054	0.237
중소벤처기업	0.954	1.301	1.488	0.949	1	0.221

C.R(Cosistency Rario : 일치비율) = 0.0018

6) AHP분석은 중요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40개 업체를 선별하여 분석하였음.

7) AHP분석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C.R. 값은 0.18%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C.R. 지수가 10% 이내면 일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함.

가. 각종 규제완화시책에 대한 인식

지난 1년 동안의 규제완화시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공장설립분야(82.0%), 환경분야(71.2%), 산업입지분야(65.5%)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림분야, 금융분야, 세제지원분야에서 전년과 동일하다는 의견이 40% 전후를 차지하여 하였으며, 특히 노동인력분야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4>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

(단위 : 개, %)

구분	응답업체수	매우 개선	약간 개선	작년과 동일	다소 미흡
창업·공장설립분야	217	18.9	63.1	16.6	1.4
환경분야	222	10.4	60.8	24.8	4.1
소방분야	225	8.9	51.1	36.9	3.1
산업입지분야	220	8.2	57.3	31.4	3.2
농림분야	213	7.0	45.5	43.2	4.2
노동인력분야	220	8.6	45.0	30.9	15.5
금융분야	221	8.6	49.8	38.5	3.2
세제지원분야	220	6.8	49.5	40.0	3.6
기타분야	198	7.6	52.5	33.3	6.6

규제완화 분야와 재정자립도간 교차분석 결과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창업·공장설립분야, 산업입지분야, 세제 및 금융지원분야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경분야, 소방분야, 농림분야, 노동인력분야, 기타분야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소방, 농림, 노동인력, 기타분야는 재정자립도가 중간인 지역에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환경분야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개선의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을 제외한 소방, 농림, 노동인력, 기타 분야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개선의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재정자립도와 규제완화의 분야별 만족도간의 교차분석

(단위 : 개, %)

구 분	재정자립도			비고 전체	
	높은 지역	중간 지역	낮은 지역		
환경분야	개선	50 (62.5)	62 (82.7)	46 (68.7)	N=222 X ² =7.974 D.F.=2 P=0.019
	전과 동일, 미흡	30 (37.5)	13 (17.3)	21 (31.3)	
	미흡	3 (3.8)	4 (5.3)	2 (3.0)	
소방분야	개선	44 (55.0)	56 (73.7)	35 (50.7)	N=225 X ² =9.237 D.F.=2 P=0.010
	전과 동일, 미흡	36 (45.0)	20 (26.3)	34 (49.3)	
	미흡	5 (6.3)	2 (2.6)	-	
농림분야	개선	36 (47.4)	51 (68.0)	25 (40.3)	N=213 X ² =11.716 D.F.=2 P=0.003
	전과 동일, 미흡	40 (52.6)	24 (32.0)	37 (59.7)	
	미흡	7 (9.2)	1 (1.3)	1 (1.6)	
노동력분야	개선	36 (47.4)	53 (69.7)	29 (42.6)	N=220 X ² =12.425 D.F.=2 P=0.002
	전과 동일, 미흡	40 (52.6)	23 (30.3)	39 (57.4)	
	미흡	10 (13.2)	9 (11.8)	15 (22.1)	
기타분야	개선	43 (60.6)	50 (71.4)	26 (45.6)	N=198 X ² =8.741 D.F.=2 P=0.013
	전과 동일, 미흡	28 (39.4)	20 (28.6)	31 (54.4)	
	미흡	2 (2.8)	4 (5.7)	7 (12.3)	

분야별 만족도와 기업규모간의 교차분석은 환경분야와 기타분야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분야와 기타분야에서는 26인~49인의 기업들이 50인 이상의 기업들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6> 기업규모와 규제완화의 분야별 만족도간의 교차분석

(단위 : 개, %)

구분		기업규모			비고 전체
		50인 이상	26인~49인	25인 이하	
환경분야	개선	50 (62.5)	62 (82.7)	46 (68.7)	N=220 X ² =7.974 D.F.=2 P=0.019
	전과 동일, 미흡	30 (37.5)	13 (17.3)	21 (31.3)	
	미흡	3 (5.5)	-	6 (5.3)	
기타분야	개선	21 (42.9)	31 (66.0)	66 (66.0)	N=196 X ² =8.206 D.F.=2 P=0.017
	전과 동일, 미흡	28 (57.1)	16 (34.0)	34 (34.0)	
	미흡	7 (14.3)	2 (4.3)	4 (4.0)	

규제완화 시책 중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특히, 노동인력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 확대(74.5%), 산업입지분야에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범위 확대(61.0%), 금융분야에서 금융기관 대출시 담보요구 금지(58.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7> 향후 중점 추진 시책

구분	향후 중점 추진시책
창업·공장설립분야	· 공장설립 추천지역 조사 정보제공(29.1%) · 창업공장설립 민원일괄처리단 구성·운영(29.1%)
환경분야	· 환경관리 중복 지도·점검 일소(37.9%) · 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분야 검토기준 완화(23.7%)
산업입지분야	·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범위 확대(61.0%)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31.7%)
농림분야	· 대체농지조성비 부과기준 완화(47.7%) · 지자체 농지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권한 확대(23.4%)
노동인력분야	·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74.5%) · 노동쟁의 기간중 대체근로자 자격 명문화(20.0%)
금융분야	· 금융기관 대출시 과도한 담보요구 금지(58.3%) · 부분보증 대출시 담보요구 관행개선(31.5%)
세계지원분야	·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등 금지(35.5%) · 경매공장을 취득한 기업의 창업인정(26.2%)
기타분야	· 기업체 단순신고사항 처리절차 간소화(38.8%) · 중요한 법이나 제도 등 변경사항 홍보(22.4%)

나. 공무원 행태와 관행개선

공무원의 행태 및 관행은 약간 개선되었다가 58.7%, 매우 개선되었다가 27.6%, 잘 모르겠다가 11.6%, 다소 미흡하다가 2.2%로 나타나,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86.3%를 차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행태와 관행은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질문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태도, 전문성 부족, 실무처리 능력 미흡, 업종별 실무 파악 능력 부족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나 지역경제관료의 전문성 확보와 실무능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다.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에 대한 질문은 약간 개선되었다가 62.5%, 잘 모르겠다 29.9%, 매우 개선되었다 6.7%, 다소 미흡하다가 0.9% 순으로 나타났다.

<표-8>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에 대한 평가

(단위 : 개, %)

구분	매우 개선	약간 개선	잘 모르겠다	다소 미흡	합계
빈도수	15	140	67	2	224
응답비율	6.7	62.5	29.9	0.9	100.0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사항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기업과 지역주민간 협력을 위한 기구 및 이해조정 기구 설치, 지역주민행사에 기업인 참여 유도 등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기업 그리고 각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문은 약간 개선되었다가 59.5%, 매우 개선되었다 11.3%, 다소 미흡하다 0.5%순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표-9>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

(단위 : 개, %)

구분	매우 개선	약간 개선	잘 모르겠다	다소 미흡	합계
빈도수	25	132	64	1	222
응답비율	11.3	59.5	28.8	0.5	100.0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는 국도와 지방도 연결(예 : 동면-공주), 에 인터체인지 신설(예 : 천안-평택 중간지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과의 구축을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공동과제 확립, 소규모 업체에 대한 산·학·연 연계 지원 확대, 산·학·연간 정기적 워크숍 개최, 상호간 정보전달체계 구축, 연구활동 지원방안 수립,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교육, 연구인력의 지방이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의 경우 자금지원분야(74.1%), 경영 및 정보지원분야(70.0%), 산업인력수급체계분야(57.4%), 수출지원분야(55.7%), 판로지원분야(55.3%), 창업촉진분야(50.9%)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인력수급체계 및 판로지원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표-10> 중소기업 지원강화에 대한 평가

(단위 : 개, %)

구 분	응답업체수	매우 개선	약간 개선	작년과 동일	다소 미흡
자금지원	224	14.3	59.8	20.1	5.8
산업인력수급체계	223	6.3	51.1	30.0	12.6
기술드라이브시책	221	5.9	39.8	50.7	3.6
창업촉진	222	5.4	45.5	44.1	5.0
판로지원	219	8.7	46.6	34.2	10.5
수출지원	219	6.8	48.9	37.4	6.8
투자유치환경	214	4.7	41.1	49.5	4.7
경영 및 정보지원	220	10.0	60.0	23.2	6.8

재정자립도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의 교차분석 결과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모든 분야에서 지역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중간인 지역에서 모든 분야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술드라이브 정책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분야, 수출지원분야, 외국인기업 투자유치환경 조성분야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낮았다. 또한 자금지원분야, 산업인력수급분야, 판로지원분야, 경영 및 정보지원분야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개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재정자립도와 중소벤처기업지원의 분야별 만족도간의 교차분석
(단위 : 개, %)

구 분		재정자립도			비고 전체
		높은 지역	중간 지역	낮은 지역	
자금지원	개선	57 (71.3)	63 (82.9)	46 (67.6)	N=224 $\chi^2=4.878$ D.F.=2 P=0.087
	전과 동일 미흡	23 (28.8)	13 (17.1)	22 (32.4)	
	미흡	4 (5.0)	4 (5.3)	5 (7.4)	
산업인력수급체계	개선	39 (49.4)	56 (73.7)	33 (48.5)	N=223 $\chi^2=12.515$ D.F.=2 P=0.002
	전과 동일 미흡	40 (50.6)	20 (26.3)	35 (51.5)	
	미흡	7 (8.9)	7 (9.2)	14 (20.6)	
기술드라이브시책	개선	25 (32.5)	47 (61.8)	29 (42.6)	N=221 $\chi^2=13.816$ D.F.=2 P=0.001
	전과 동일 미흡	52 (67.5)	29 (38.2)	39 (57.4)	
	미흡	2 (2.6)	4 (5.3)	2 (2.9)	
벤처기업 창업촉진 성장동력	개선	33 (41.8)	47 (62.7)	33 (48.5)	N=222 $\chi^2=6.942$ D.F.=2 P=0.031
	전과 동일 미흡	46 (58.2)	28 (37.3)	35 (51.5)	
	미흡	5 (6.3)	5 (6.7)	1 (1.5)	
판로지원	개선	36 (47.4)	54 (71.1)	31 (45.6)	N=220 $\chi^2=12.135$ D.F.=2 P=0.002
	전과 동일 미흡	40 (52.6)	22 (28.9)	37 (54.4)	
	미흡	10 (13.2)	6 (7.9)	7 (10.4)	
수출지원	개선	31 (41.3)	56 (73.7)	35 (51.5)	N=219 $\chi^2=16.729$ D.F.=2 P=0.000
	전과 동일 미흡	44 (58.7)	20 (26.3)	33 (48.5)	
	미흡	7 (9.3)	3 (3.9)	5 (7.4)	
외국기업 투자유치 및 환경조성	개선	22 (30.6)	46 (60.5)	30 (45.5)	N=219 $\chi^2=16.729$ D.F.=2 P=0.000
	전과 동일 미흡	50 (69.4)	30 (39.5)	36 (54.5)	
	미흡	3 (4.2)	3 (3.9)	4 (6.1)	
경영 및 정보지원	개선	52 (68.4)	61 (80.3)	41 (60.3)	N=220 $\chi^2=6.953$ D.F.=2 P=0.031
	전과 동일 미흡	24 (31.6)	15 (19.7)	27 (39.7)	
	미흡	2 (2.6)	6 (7.9)	7 (10.3)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 토론회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시책 중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특히, 경영 및 지원분야의 산업정보망 구축·운영(38.7%), 기술드라이브시책 전개 분야에서 산업진흥센터 설립·운영(35.5%), 수출지원분야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확대(34.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12> 향후 중점 추진 시책

구분	향후 중점 추진시책
자금지원분야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33.9%) ·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정보공유 협약을 통한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23.1%)
산업인력 수급체계 확립	· 산업연수생 배정 확대(24.5%) · 충남산업인력지원센터설치 운영(14.6%)
기술드라이브 시책전개	· 산업기술진흥센터 설립 운영(35.5%) · 산학연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19.9%)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 창출	·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기회 제공(26.5%) · 벤처경영지원센터 운영 활성화(19.1%)
판로지원	·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제도 강화(26.5%) ·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생산업체간 간담회 운영(19.9%)
수출지원	·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확대(34.2%) · 안정적 수출활동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30.9%)
외국기업 투자유치 환경조성	· 외국인 투자기업 도우미 운영(39.1%) · 유망투자가 초청 One for One Service 실시(31.9%)
경영 및 정보지원	· 산업정보망 구축 운영(38.7%) ·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확충(27.1%)

이 외에 제시된 의견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영세업체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신용대출 활성화, 제품판매를 위한 바이어, 유통업체와의 정기적 미팅 주선, 제품판로지원 확대 등으로 나타나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바. 기타 의견

기타 개선과제로는 산업용 쓰레기 처리문제(산업용 쓰레기 소각로 설치), 기업제품에 대한 책자 및 상시전시회 개최 등 홍보활동 강화, 소규모업체 현황파악 및 실질적 지원책 강구, 유망중소기업 선정 확대, 중소기업 센터 설립 등으로 나타났다.

IV.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추진 과제

1. 종합평가

수도권 집중 및 규제완화 따른 지역간 불균형은 정보화,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역량의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를 종합해 볼 때 짧은 기간에 5개 분야, 118개의 구체적인 시책들이 추진되었고, 아직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점이 있었으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모든 분야에서 시책추진 결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정책의 목표와 그 실현수단에 있어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1) 지역경제정책 목표의 재정립

미국의 경우 지역경제정책의 목표는 새로운 지역직업창출, 지역소득증대, 낙후지역 취업 기회 확대, 바람직한 기업경영환경 조성, 여성 및 소수민족의 소기업 경영기회 확대로 요약되고 있으며, 세부목표로는 기존기업의 활성화 및 확장, 새로운 기업창업, 기업유치, 첨단기술산업 육성, 국제교역 진흥, 지역경제기반 강화, 기능인력 양성, 관광산업 육성, 기반산업의 다양화, 기술진흥으로 요약된다⁸⁾.

8) 홍기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미국 지방정부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0권 제1호, 1998. p.68.

그러나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의 경우는 새로운 지역직업창출이나 지역소득 증대, 지역복지, 지역기반산업 조성에 보다는 제조업 위주의 기업 환경 여건조성과 수도권 소재의 기업유치전략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기반이 양호한 도시지역인 경우는 도시특화산업 육성, 집적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원활화하게 하는 방안, 또는 도시기반산업 조성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도시지역의 경우는 직업창출을 통한 고용증대, 소득증대, 창업의 지원 등에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반면 산업기반이 양호한 농촌지역의 경우는 농외소득 증대나 유효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둘 수 있으며, 산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경우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방안이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표-13> 지역경제목표 예시

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산업기반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특화산업 육성 · 도시기능 원활화 · 도시기반산업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외소득 증대 · 유효 노동력 활용
산업기반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창출-고용증가 · 소득증대 ·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존자원 활용 · 삶의 질 향상

2) 공간성과 지역간 형평성의 고려

그 동안 우리나라 지역경제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세제지원과 금융혜택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이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의 경우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인력수급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9) 홍기용,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접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권, 1991.6. p.120.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정책수단이 제시됨에 따라 진일보(進一步)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효과는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다르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업의 만족도나 개선의 효과는 일률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획일적인 정책수단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전략과 지역 내 균형개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즉,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지역별 차등화 된 전략-인센티브 부여, 행·재정지원 등-을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수단의 다양화

라이트(K. Leicht, 1994) 등은 지역정책수단을 산업유치정책(용자 및 용자보증, 신용회사 설립, 산업공단 조성, 판매세 감면, 직업훈련 등), 기업정책(모험자본 지원, 기술지원센터, 첨단산업 조세감면, 기능인력 공급 등), 노동규제완화 정책(노동법 완화, 환경법 완화, 최소임금제 폐지 등)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¹⁰⁾. 또한 그는 1980년대는 기업유치정책, 1990년 초에는 기업정책, 1990년 말에는 행정규제완화 정책이 우선 순위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라이트의 분류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정책수단은 산업유치정책과 기업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산업유치정책 및 기업정책과 함께 노동규제 완화 정책도 심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외국인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생활환경 개선, 여성 및 노인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노사분규의 사전예방 등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10) K. T. Leicht and J. C. Jenkins, Three Strategies of State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8(3), 1994.

4) 지역경제정책의 기본 틀 마련

성공적인 지역경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경제문제는 무엇인가? 지역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모형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지역경제정책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관련 부서,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정보협의회를 조직하여 제조업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상호 기업간, 산업간, 경제주체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2. 향후 정책추진 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지역경제정책의 흐름은 정부개입에 의한 생산비 절감이나, 타 지역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구조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시장개발에 역점을 둔 수요위주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¹¹⁾. 이는 지역경제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특성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충청남도의 지역경제정책 수단은 기업가적 입장에서 기존의 재정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규제조정 등 소극적인 공급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서비스 제공, 산업인력의 훈련 및 재교육 실시, 수출시장 및 판로개척, 연구개발 및 개발보조, 개발권 부여, 부동산 관리 서

11) 에이싱어(P. Eisinger, 1988)는 지역경제정책을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으로 구분하였다. 공급정책이란 정부정책개입으로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기업의 활성화와 확장은 물론 타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고, 수요정책은 지역기업의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소득탄력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질을 향상시킨다는 정책이다.

비스 제공, 사회간접자본 민영화 등 적극적인 수요정책으로 전환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맞춤형 정책수단의 강구

지역의 기업여건과 특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수요에 부응한 차별화 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어느 정도 기업 경제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은 기존 기업 위주의 활성화 정책과 산업구조 개선 정책 위주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저개발지역은 경제기반 산업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기업 창업과 경쟁력 있는 경제환경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업무를 전담할 특별기관을 설치(예: 영국의 지역개발청 RDA)하여 위원회에 권한을 전폭적으로 위임하고, 지역경제발전계획

영역	공급정책	수요정책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감면 조세유예 금융지원 부채보조 금융알선 채권발행 직접금융 물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지원 재무회계서비스 훈련 및 재교육 지원 판매대금회수 보장 첨단산업 보육 자본공급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전시회 전문상가 조성 선견지 견학 홍보물(책자, 비디오)제작 영업장소 제공 이벤트 개최(거리축제 페스티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시장 개척 판매공동 노력 각종 위원회 구성 외래구매자 유치 시장규모 확대
행정관리 중앙정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동사무실 개설 토지이용분류 개선 경제환경개선 환경규제 조정 지역노동제공 지원부서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및 개발보조 모험기업육성 재개발 산업공단관리서비스
토지부동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공급(임대, 무상) 기업재배치 토지개발(사업지구 통합) 토지구입자금지원 토지개발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권 부여 부동산관리서비스 재개발 산업공단관리서비스
사회간접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시설 도로개설 교통체계개선 쓰레기 처리(공중위생) 환경미화 항만 휴식공간 제공 문화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간접자본 민영화

수립에 민간기업, 지역민, 지역단체, 관련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

3. 지역경제관료의 전문성 확보

성공적인 지역경제정책의 요인으로 지방경제관료의 능력, 지방의회의 전문성, 지역 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지방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쫓겨 자기개발의 기회가 매우 적고,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 안식년제 도입을 통하여 정보화, 개방화, 지방화로 인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부서와 교수, 교육생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장기적인 산업인력수급체계 구축

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

장기적으로 산학연연계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산·학·연·관 연계체계 구축

충남에서 인력수급문제는 공급체계에 있다기보다는 주문식교육, 인턴십 제도 활성화 등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인력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¹²⁾.

또한 산학연과의 공동과제 확립, 소규모 업체에 대한 산학연 연계 지원 확대, 산학연간 정기적 워크숍 개최, 상호간 정보전달체계 구축, 연구활동 지원방안 수립,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교육, 연구인력의 지방이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식기반경제사회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립하고,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등을 정비하고, 유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제도화하여 업무 이양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체, 학교, 훈련기관, NGO 등의 지역 공동체를 아우르는 지역 직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용정책기본법상의 지방고용심의회, 지역 고용촉진 훈련 조정 협의회의 기능도 흡수할 필요가 있다.

12) 충남도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주문식 교육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1년 6월 현재 동우 ENC(주)등 154개 업체에서 주문한 토목측량 외 93개 직종에 천안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14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1,88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전문대학으로는 공주영상정보대학, 대천대학, 동양공업전문대학, 신성대학, 연암공업대학, 충청대학, 해진대학 등 7개 대학에서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한무호, 지방산업인력의 육성 및 공급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1)

【 참 고 문 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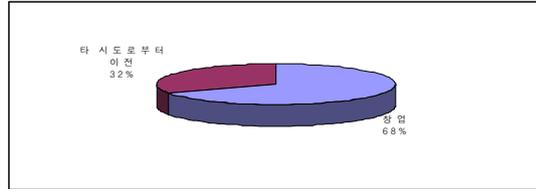
- 김정연·전영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영향권 개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3권 제3호, 2001.
- 이두원, 기업의 대 지역사회 관계와 쟁점관리에 관한 연구, 홍보학연구, 1997.
- 정세욱,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자치역량제고,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역량제고 방안」 포럼,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2002.
- 홍기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미국 지방정부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0권 제1호, 1998.
- _____,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접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권, 1991.6.
- 한무호, 지방산업인력의 육성 및 공급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1.
- 최상철, 한국적 지역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제3권, 1991.6.
- 충청남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추진상황 보고자료, 2002.
- Eisinger, Peter, The Rise of The Entrepreneurial Stat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edison, 1988.
- Leicht, K. T. and J. C. Jenkins, Three Strategies of State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8(3), 1994.

【 부 록 】

I.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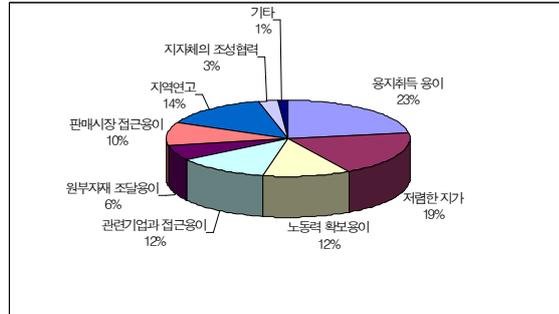
1. 귀사는 충청남도에서 창업을 하셨습니까?

구분	빈도수	응답율(%)
창업	153	68.0
타 시도로부터 이전	72	32.0
계	2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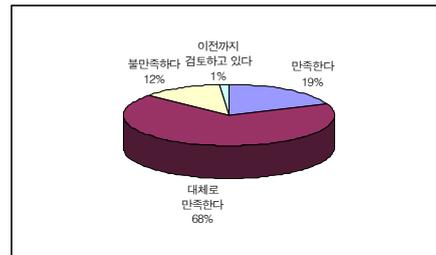
2. 귀사가 충청남도에서 창업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수	응답율(%)
용지취득 용이	35	22.7
저렴한 지가	29	18.8
노동력 확보용이	18	11.7
관련기업과 접근용이	19	12.3
원부자재 조달용이	10	6.5
판매시장 접근용이	15	9.7
지역연고	22	14.3
지자체의 조성협력	4	2.6
기타	2	1.4
계	1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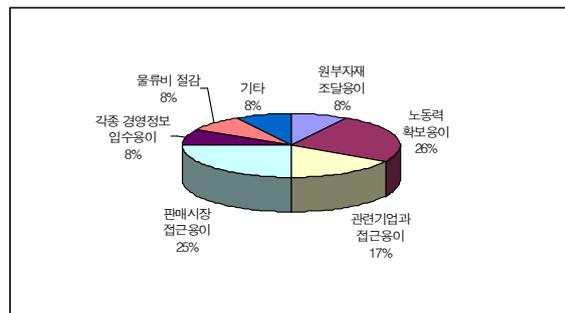
3. 귀사의 기업운영 여건은 어떠 하신지요?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만족한다	42	18.9
대체로 만족한다	150	67.6
불만족하다	27	12.2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다	3	1.3
계	222	100.0



4. 귀사가 수도권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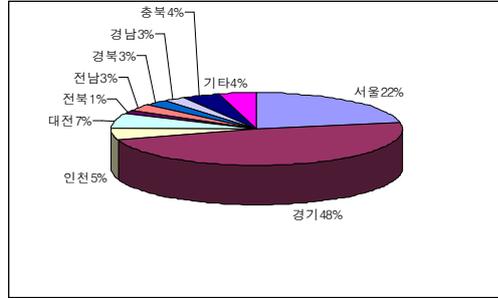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원부자재 조달용이	1	8.3
노동력 확보용이	3	25.0
관련기업과 접근용이	2	16.7
판매시장 접근용이	3	25.0
각종 경영정보 입수용이	1	8.3
물류비 절감	1	8.3
기타	1	8.3
계	12	100.0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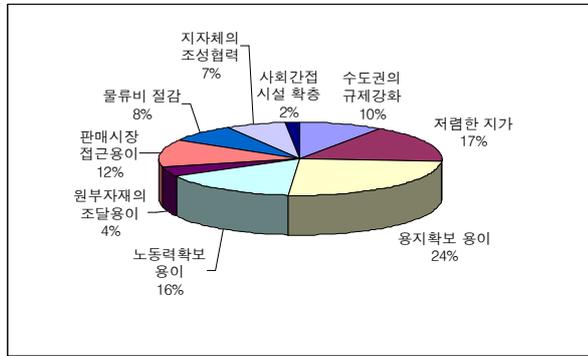
5. 귀사가 타 시도로부터 이전하셨다면 어디로부터 이전하셨습니다가?

구분	빈도수	응답율(%)
서울	16	21.9
경기	35	47.9
인천	4	5.5
대전	5	6.8
전북	1	1.4
전남	2	2.7
경북	2	2.7
경남	2	2.7
충북	3	4.1
기타	3	4.1
계	73	100.0



6. 귀사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부터 이전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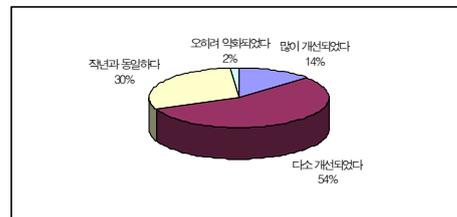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수도권의 규제강화	11	9.6
저렴한 지가	19	16.5
용지확보 용이	29	25.2
노동력확보 용이	18	15.7
원부자재의 조달용이	5	4.3
판매시장 접근용이	14	12.2
물류비 절감	9	7.8
지자체의 조성협력	8	7.0
사회간접시설 확충	2	1.7
계	115	100.0



II.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조성

1. 귀사는 금년(2002년)에 충청남도의 기업활동여건이 작년(2001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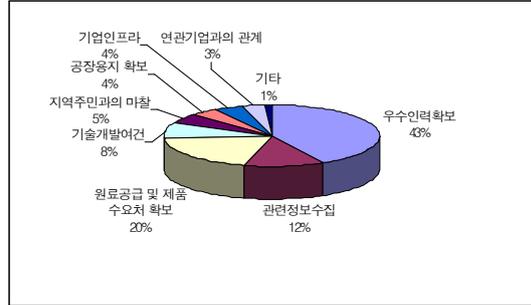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많이 개선되었다	30	13.5
다소 개선되었다	122	55.0
작년과 동일하다	66	29.7
오히려 악화되었다	4	1.8
계	222	100.0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추진상황 평가와 향후 과제 / 한무호

2. 귀사가 충청남도에서 기업활동하는데 있어 느끼는 경영애로 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빈도수	응답율(%)
우수인력 확보	177	42.2
관련정보수집	50	11.9
원료공급 및 제품 수요처 확보	82	19.6
기술개발여건	35	8.4
지역주민과의 마찰	20	4.8
공장용지 확보	18	4.3
기업인프라	18	4.3
연관기업과의 관계	14	3.3
기타	5	1.2
계	4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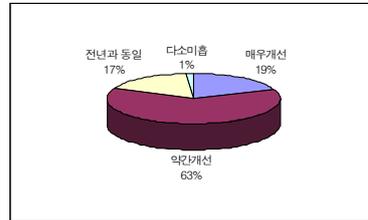


Ⅲ.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

1.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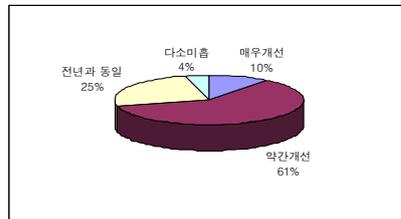
(1) 창업·공장설립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41	18.9
약간개선	137	63.1
전년과 동일	36	16.6
다소미흡	3	1.4
계	217	100.0



(2) 환경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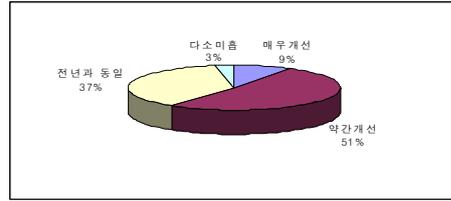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23	10.4
약간개선	135	60.8
전년과 동일	55	24.8
다소미흡	9	4.1
계	222	100.0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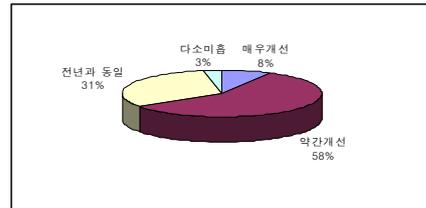
(3) 소방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20	8.9
약간개선	115	51.1
전년과 동일	83	36.9
다소미흡	7	3.1
계	2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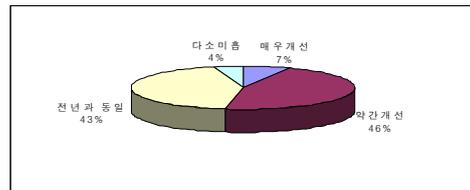
(4) 산업입지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8	8.2
약간개선	126	57.3
전년과 동일	69	31.4
다소미흡	7	3.2
계	2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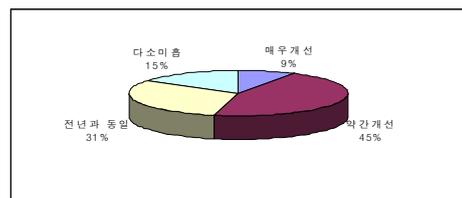
(5) 농림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5	7.0
약간개선	97	45.5
전년과 동일	92	43.2
다소미흡	9	4.2
계	2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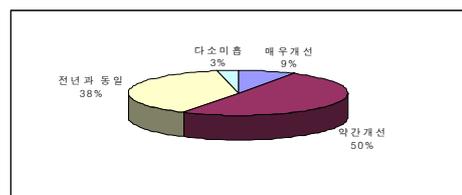
(6) 노동·인력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9	8.6
약간개선	99	45.0
전년과 동일	68	30.9
다소미흡	34	15.5
계	220	100.0



(7) 금융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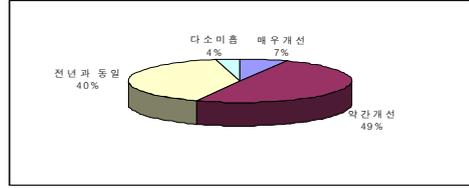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9	8.6
약간개선	110	49.8
전년과 동일	85	38.5
다소미흡	7	3.2
계	221	100.0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추진상황 평가와 향후 과제 / 한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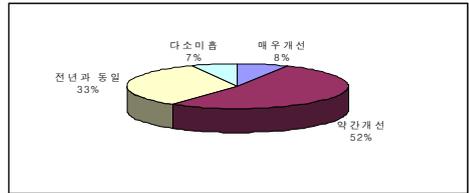
(8) 세제지원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5	6.8
약간개선	109	49.5
전년과 동일	88	40.0
다소미흡	8	3.6
계	220	100.0



(9) 기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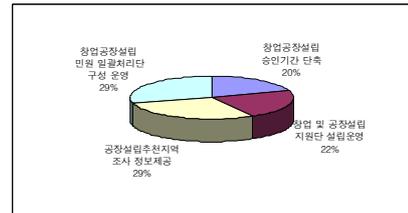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5	7.6
약간개선	104	52.5
전년과 동일	66	33.3
다소미흡	13	6.6
계	198	100.0



※ 향후 충청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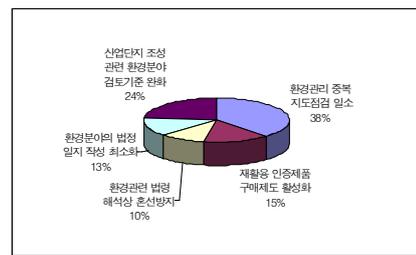
2. 창업 및 공장설립 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창업공장설립 승인기간 단축	44	19.7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단 설립운영	49	22.0
공장설립 추천지역 조사 정보제공	65	29.1
창업공장설립 민원 일괄처리단 구성 운영	65	29.1
계	2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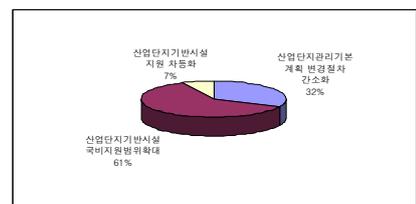
3. 환경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환경관리 중복 지도점검 일소	85	37.9
재활용 인증제품 구매제도 활성화	33	14.7
환경관련 법령해석상 혼선방지	23	10.3
환경분야의 법정일지 작성 최소화	30	13.4
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분야 검토기준 완화	53	23.7
계	224	100.0



4. 산업입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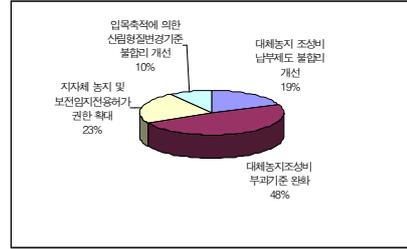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69	31.7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범위 확대	133	61.0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차등화	16	7.3
계	218	100.0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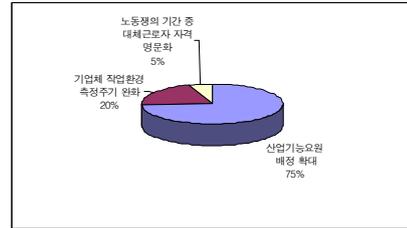
5. 농림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제도 불합리 개선	38	19.3
대체농지조성비 부과기준 완화	94	47.7
지자체 농지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권한 확대	46	23.4
입목축적에 의한 산림형질변경기준 불합리 개선	19	9.6
계	1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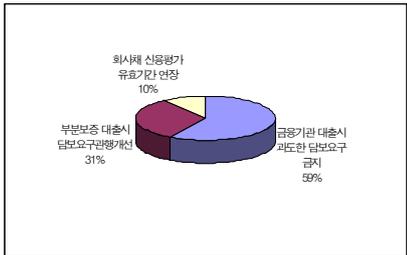
6. 노동인력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164	74.5
기업체 작업환경 측정주기 완화	44	20.0
노동쟁의 기간 중 대체근로자 자격 명문화	12	5.5
계	2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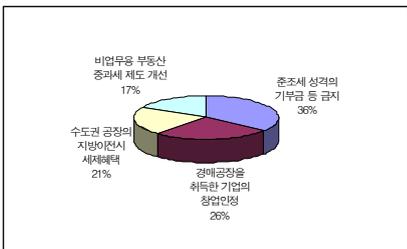
7. 금융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금융기관 대출시 과도한 담보요구 금지	126	58.3
부분보증 대출시 담보요구 관행개선	68	31.5
회사채 신용평가 유효기간 연장	22	10.2
계	2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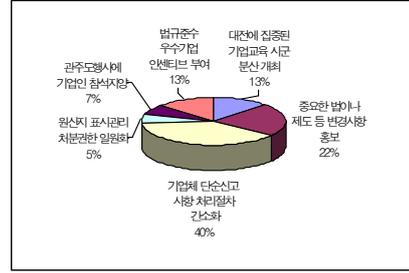
8. 세제지원분야

구분	빈도수	응답율(%)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등 금지	76	35.5
경매공장을 취득한 기업의 창업인정	56	26.2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45	21.0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제도 개선	37	17.3
계	214	100.0



9. 기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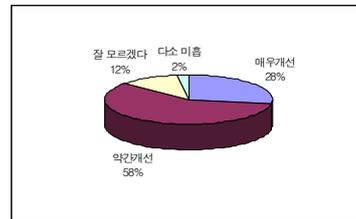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대전에 집중된 기업교육 시군분산 개최	28	12.8
중요한 법이나 제도 등 변경사항 홍보	49	22.4
기업체 단순신고사항 처리절차 간소화	85	38.8
원산지 표시관리 처분권한 일원화	12	5.5
관주도행사에 기업인 참석지양	16	7.3
법규준수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29	13.2
계	219	100.0



IV. 공무원 행태와 관행개선에 관한 평가

1. 공무원의 태도와 관행이 종전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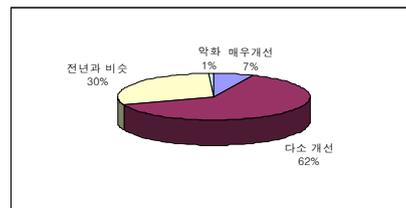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62	27.6
약간개선	132	58.7
잘 모르겠다	26	11.6
다소 미흡	5	2.2
계	225	100.0



V.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조성에 관한 평가

1. 기업과 지역민의 관계에 대해 종전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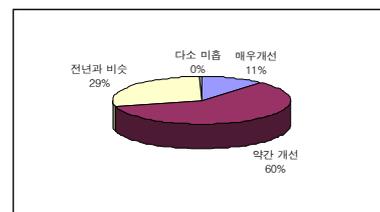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5	6.7
다소 개선	140	62.5
전년과 비슷	67	29.9
악화	2	0.9
계	224	100.0



VI.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확충에 관한 평가

1.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가 종전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25	11.3
약간 개선	132	59.5
전년과 비슷	64	28.8
다소 미흡	1	0.5
계	2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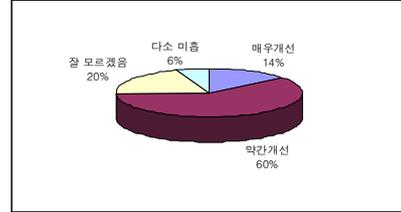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 토론회

Ⅶ. 중소기업 지원강화

1. 중소기업 지원강화 정책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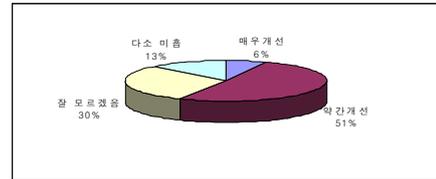
(1) 자금지원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32	14.3
약간개선	134	59.8
전년과 동일	45	20.1
다소 미흡	13	5.8
계	2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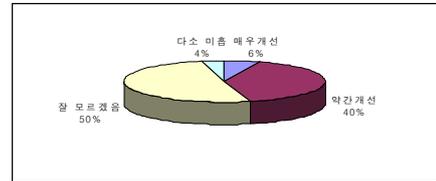
(2) 산업인력수급체계 확립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4	6.3
약간개선	114	51.1
전년과 동일	67	30.0
다소 미흡	28	12.6
계	2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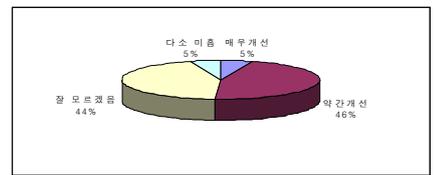
(3) 기술드라이브 시책전개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3	5.9
약간개선	88	39.8
전년과 동일	112	50.7
다소 미흡	8	3.6
계	2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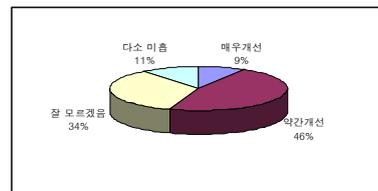
(4)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 창출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2	5.4
약간개선	101	45.5
전년과 동일	98	44.1
다소 미흡	11	5.0
계	222	100.0



(5) 판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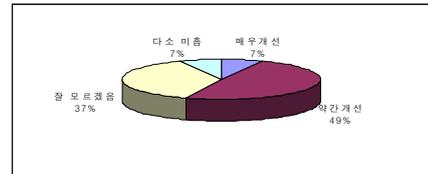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9	8.7
약간개선	102	46.6
전년과 동일	75	34.2
다소 미흡	23	10.5
계	219	100.0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추진상황 평가와 향후 과제 / 한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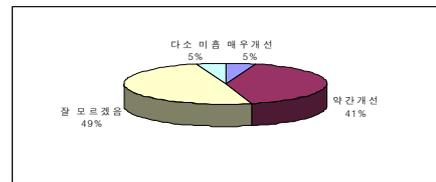
(6) 수출지원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5	6.8
약간개선	107	48.9
전년과 동일	82	37.4
다소 미흡	15	6.8
계	2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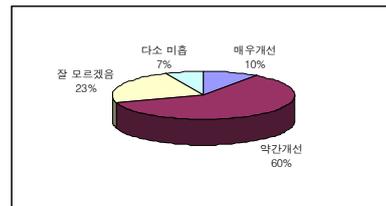
(7) 외국기업 투자 유치 및 환경조성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10	4.7
약간개선	88	41.1
전년과 동일	106	49.5
다소 미흡	10	4.7
계	2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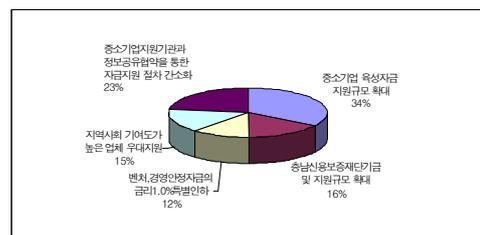
(8) 경영 및 정보지원

구분	빈도수	응답율(%)
매우개선	22	10.0
약간개선	132	60.0
전년과 동일	51	23.2
다소 미흡	15	6.8
계	220	100.0



2. 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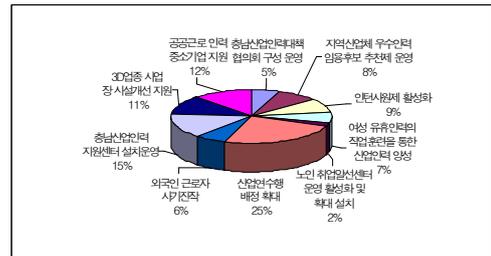
구분	빈도수	응답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126	33.9
충남신용보증재단 기금 및 지원규모 확대	59	15.9
벤처 경영안정자금의 금리 1.0% 특별인하	44	11.8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 우대지원	57	15.3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정보공유협약을 통한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86	23.1
계	372	100.0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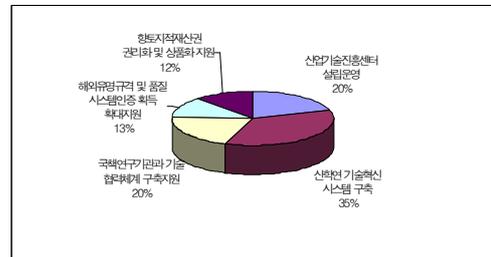
3. 산업인력수급체계 확립

구분	빈도수	응답율(%)
충남산업인력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21	5.5
지역산업체 우수인력 임용후보 추천제 운영	32	8.3
인턴사원제 활성화	33	8.6
여성 유휴인력의 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	25	6.5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 활성화 및 확대 설치	8	2.1
산업연수행 배정 확대	94	24.5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24	6.3
충남산업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56	14.6
3D업종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44	11.5
공공근로 인력 중소기업 지원	47	12.2
계	3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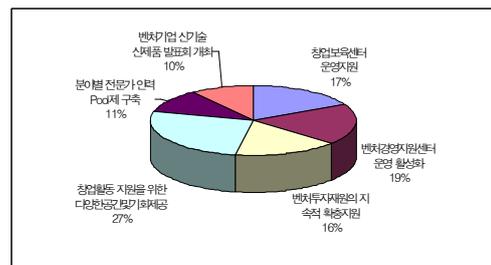
4. 기술드라이브 시책전개

구분	빈도수	응답율(%)
산업기술진흥센터 설립운영	69	19.9
산학연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123	35.5
국책연구기관과 기술협력체계 구축지원	69	19.9
해외유명규격 및 품질시스템 인증획득 확대지원	44	12.7
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화 및 상품화 지원	41	11.8
계	3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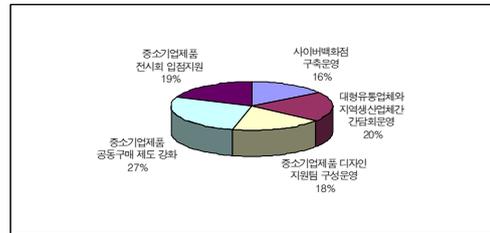
5.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 창출

구분	빈도수	응답율(%)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59	17.4
벤처경영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65	19.1
벤처투자재원의 지속적 확충지원	55	16.2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 및 기회 제공	90	26.5
분야별 전문가 인력 Pool제 구축	37	10.9
벤처기업 신기술, 신제품 발표회 개최	34	10.0
계	3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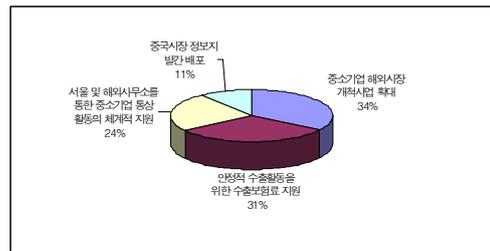
6. 판로지원

구분	빈도수	응답율(%)
사이버백화점 구축운영	54	15.6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생산업체간 간담회 운영	69	19.9
중소기업제품 디자인지원팀 구성운영	63	18.2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제도 강화	94	27.2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입점지원	66	19.1
계	3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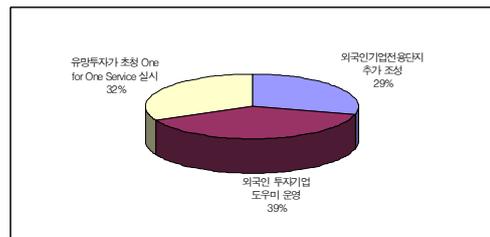
7. 수출지원

구분	빈도수	응답율(%)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확대	114	34.2
안정적 수출활동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103	30.9
서울 및 해외사무소를 통한 중소기업 통상활동의 체계적 지원	81	24.3
중국시장 정보지 발간 배포	35	10.5
계	3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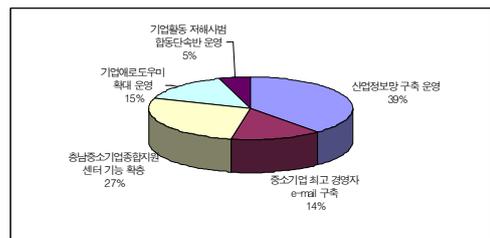
8. 외국기업 투자유치 환경조성

구분	빈도수	응답율(%)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 조성	80	29.0
외국인 투자기업 도우미 운영	108	39.1
유망투자가 초청 One for One Service 실시	88	31.9
계	276	100.0



9. 경영 및 정보지원

구분	빈도수	응답율(%)
산업정보망 구축 운영	127	38.7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e-mail 구축	47	14.3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확충	89	27.1
기업에도우미 확대 운영	49	14.9
기업활동 저해사범 합동단속반 운영	16	4.9
계	328	100.0



제 2 주제

충청남도의 산업발전여건과 기업유치전략

김인중(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정보센터 소장)

목 차

- I. 서 론
- II. 충남의 산업발전 여건
- III. 충남의 SWOT 분석
- IV. 충남의 산업발전 비전
- V. 기업유치전략

I. 서 론

- 2003년 들어서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음.
 - 지역불균형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민통합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 수도권 경제력 집중 심화 : 인구 46.6%(2001년), 조세수입비중 70.9%(2001년) GRDP 47.0%(2001년), 30대기업 본사 88.5%(2001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사안에 따라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지방화시대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
 - 국토균형발전의 추진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주도로 바뀌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임.
- 그러나 여기서 국토의 균형발전은 사후적인 결과의 평등보다는 사전적인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지역간 경쟁이 불가피하며, 지역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임.
- 국내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 건설을 목표로 수도권 입지규제완화와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의 지정 등으로 인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충청권의 경우 오히려 기업입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문제, 세계화의 가속화로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임.
 - 특히 중국은 경제특구를 자원 집중과 시장경제 확산의 전진기지로 삼아 경

제·사회 전체의 개방에 성공하여, 이른바 세계 투자의 '블랙 홀'로 부상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지자체는 이제까지의 중앙정부 지원의 타율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창업 촉진 그리고 혁신역량 강화 등의 지역산업발전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

II. 충남의 산업발전 여건

1. 인문·사회환경

1) 지리적 위치

-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 면적은 8,586.4km²로 남한 전체 면적(99,816.48km²)의 8.6%를 차지.
- 국도 1호선, 경부·호남선 철도, 경부·호남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관통하고 있어 수도권과 국토의 동남부와 서남부를 연결시키는 국내 지역간 교류중심지 역할을 수행.
- 충남의 모든 시·군은 수도권과 1~2시간 거리대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개발압력의 1차적인 흡수·완충기능을 수행하며 행정수도 이전의 적지로 부상.

2) 인구

- 충남의 총인구는 2001년 말 현재 1,928천명으로 전국의 3.99%를 차지하고, 1990~1995년 사이에는 연평균 -1.8%씩 감소하였으나 1995년을 정점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시·군별 인구분포는 천안시(21.9%), 아산시(9.6%), 서산시(7.8%), 논산시(7.4%), 공주시(7.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인구가 충남인구의 46.4%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서북부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음(2000년).
- 충남의 연령별 인구구성비는 0~14세의 연령층과 15~44세 연령층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45세 이상의 구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구성비(12.0%)가 전국 평균(7.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인구의 고령화가 심함.

<표-1> 충남의 인구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연평균변화율	
					'90~'95	'96~'01
전 국	42,869	45,982	47,977	48,289	1.4	0.6
충 남	2,028	1,855	1,930	1,928	-1.8	0.5
구성비	4.73	4.03	4.02	3.99	-	-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표-2> 충남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단위 : %)

2000년	0~14세	15~29세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전 국	21.2	25.2	26.6	19.6	7.3
읍부	22.6	22.5	25.9	19.4	9.5
면부	16.5	19.6	19.7	26.2	18.0
동부	21.8	26.4	27.7	18.7	5.4
충 남	20.2	23.3	23.0	21.4	12.0
읍부	21.3	23.8	24.1	20.8	10.1
면부	16.2	21.7	18.6	25.7	17.8
동부	24.7	25.1	28.2	16.1	5.8

자료 :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2000.

3) 생활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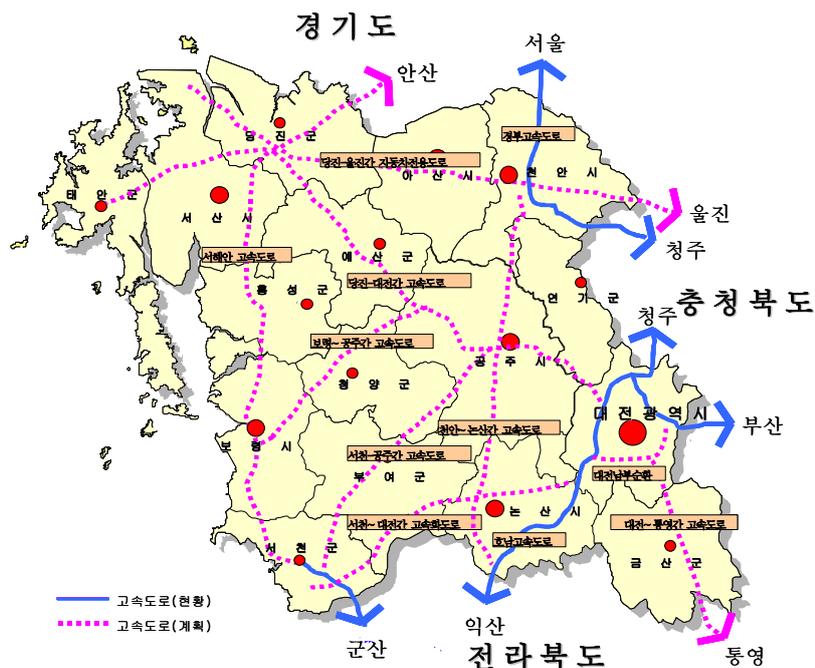
○ 거점도시의 편재

- 대전광역시와 천안시가 대전·충남지역 전체 중심기능의 각각 32.2%와 7.4%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중심이 각각 동남, 동북에 편재되어 있음.
- 따라서 도청이전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고려하고, 충남 전역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거점지역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지역교통망의 취약

- 현재 충남의 지역간 교통망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남북을 연계하는 교통체계는 잘 발달되어 있으나 서북부지역~대전간, 서부해안~중부내륙간의 동서기간교통망이 미흡함.
- 그러나 천안~논산 고속국도, 대전~통영간 고속국도의 개통과 함께 앞으로 계획중인 보령~공주간 고속국도, 당진~대전간 고속국도 등이 완공되면 충남의 교통망은 상당히 개선될 것임.

[그림-1] 고속도로 확충구상도



2. 산업·경제 현황

1) 산업구조

- 충남의 산업총생산액은 2000년 현재 20조 560억원에 이르며, 산업구조는 1990년 농림어업 27.5%, 광공업 27.0%, 서비스업이 45.5%에서 2000년에는 농림어업 15.5%, 광공업 39.2%, 서비스업이 45.2%로 광공업비중의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남.
- 전국 평균에 비해서 2000년 현재 농림어업의 비중은 거의 2.5배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은 10% 포인트 낮게 나타남.
- 충남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나 농림어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면, 문화관광의 시대에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음.

<표-3> 충남의 산업구조

(단위 : 10억원, %)

구 분	전 국						충 남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산업총생산	228,052	100.0	340,463	100.0	450,217	100.0	8,268	100.0	13,672	100.0	20,056	100.0
농림어업	19,730	8.7	22,871	6.7	24,332	5.4	2,272	27.5	2,660	19.5	3,117	15.5
광업	1,138	0.5	1,063	0.3	846	0.2	65	0.8	91	0.7	76	0.4
제조업	76,078	33.4	108,350	31.8	174,400	38.7	2,166	26.2	3,859	28.2	7,788	38.8
서비스업	131,107	57.5	208,179	61.1	250,640	55.7	3,765	45.5	7,063	51.7	9,075	45.2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2) 제조업 현황

- 2000년 현재 제조업체수 10,819개, 종업원수 140,043명, 제조업생산액은 9조 3,520억원임.
- 충남 제조업의 생산액 기준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1998년에 화합물및화학제품업(22.7%), 영상음향및통신장비업(12.3%), 자동차및트레일러업(9.4%), 기타기계및장비업(8.1%), 제1차금속업(7.4%), 고무및플라스틱업(5.8%) 순으로 나타남.
- 연평균 성장속도는 기타운송장비업이 55.9%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업(48.7%), 자동차및트레일러업(47.2%), 영상음향및통신장비업(39.6%), 기타기계및장비업(36.3%)순으로 나타나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4> 충남의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91		1995		1998		연평균 증가율		
							91-95	95-98	91-98
섬유제품제조업	392,035	9.3	785,503	6.1	929,783	5.1	19.0	5.8	13.1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71,258	1.7	77,722	0.6	65,089	0.4	2.2	-5.7	-1.3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100,700	2.4	130,931	1.0	63,973	0.4	6.8	-21.2	-6.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0,165	0.7	74,864	0.6	84,339	0.5	25.5	4.1	15.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95,443	7.0	943,814	7.3	1,258,046	6.9	33.7	10.1	23.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3,622	1.0	124,105	1.0	127,502	0.7	29.9	0.9	16.6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574,219	13.6	804,640	6.2	-	-	8.8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53,484	15.4	2,505,125	19.3	4,131,324	22.7	39.9	18.1	30.1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201,637	4.8	545,427	4.2	1,059,692	5.8	28.2	24.8	26.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76,040	16.0	1,028,774	7.9	878,968	4.8	11.1	-5.1	3.8
제1차금속산업	246,894	5.8	911,970	7.0	1,338,204	7.4	38.6	13.6	27.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52,200	3.6	580,173	4.5	980,480	5.4	39.7	19.1	30.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9,026	4.0	1,316,881	10.2	1,477,845	8.1	67.1	3.9	36.3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제조업	-	-	212,947	1.6	312,574	1.7	-	13.6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04,539	4.8	830,353	6.4	695,788	3.8	41.9	-5.7	19.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16,417	5.1	1,200,378	9.3	2,234,515	12.3	53.5	23.0	39.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26,062	0.6	186,004	1.4	419,783	2.3	63.4	31.2	48.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4,272	2.7	510,265	3.9	1,711,726	9.4	45.4	49.7	47.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746	0.3	49,086	0.4	240,777	1.3	46.2	69.9	55.9
가구 및 기타 제조업	57,913	1.4	124,673	1.0	157,911	0.9	21.1	8.2	15.4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	15,144	0.1	25,600	0.1	-	19.1	-
합 계	4,236,672	100.0	12,958,779	100.0	18,193,919	100.0	-	-	-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 1998년 생산액 기준의 입지계수의 경우, 음식료품(1.55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2.085), 코크스, 석유정제품(2.087), 화합물 및 화학제품(1.516), 고무 및 플라스틱(1.182), 비금속광물제품(1.044), 조립금속제품(1.04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품(1.806) 등 8부문에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5> 충남 제조업의 입지계수(생산액 기준)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음식료품제조업	2.340	2.086	2.253	1.959	1.935	1.699	1.577	1.554
섬유제품제조업	1.060	0.794	0.883	0.911	0.962	0.923	0.775	0.692
의복 및 모피제품	0.466	0.317	0.189	0.198	0.174	0.232	0.212	0.156
가죽가방마구류신발	0.587	0.613	0.581	0.645	0.582	0.462	0.491	0.215
목재및나무제품	0.543	0.643	0.724	0.654	0.581	0.526	0.554	0.565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2.202	2.142	2.214	2.222	2.376	2.300	2.204	2.085
출판, 인쇄및기록매체	0.529	0.540	0.484	0.364	0.437	0.409	0.314	0.317
코크스, 석유정제품	2.323	1.794	1.630	1.398	1.187	2.087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96	1.905	1.771	1.812	1.809	1.414	1.371	1.516
고무 및 플라스틱	1.012	0.873	0.815	0.913	0.938	1.070	1.110	1.182
비금속광물제품	2.595	1.847	1.950	1.725	1.629	1.360	1.155	1.044
제 1 차금속산업	0.526	0.400	0.352	0.477	0.712	0.864	0.813	0.594
조립금속제품	0.687	0.758	0.811	0.870	0.828	0.980	1.012	1.047
기타기계및장비	0.370	0.559	0.960	0.990	1.031	0.975	0.987	0.936
사무계산회계용기계	-	2.201	1.192	0.371	0.979	1.170	0.395	0.414
기타전기기계및전기	1.202	1.116	1.467	1.717	1.601	1.390	0.662	0.843
영상음향및통신장비	0.424	0.847	0.543	0.748	0.633	0.692	0.863	0.728
의료정밀 광학기기사계	0.491	0.558	0.772	1.371	1.183	1.118	1.075	1.806
자동차 및 트레일러	0.249	0.224	0.250	0.322	0.352	0.341	0.941	0.900
기타 운송장비	0.075	0.066	0.073	0.131	0.108	0.079	0.068	0.220
가구 및 기타	0.442	0.377	0.460	0.391	0.425	0.393	0.459	0.436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	-	1.080	0.807	0.486	0.502	0.599

- 광공업체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천안시(31.7%), 아산시(12.7%), 논산시(7.3%), 연기군(7.1%), 금산군(6.0%) 순으로 나타나 광공업체의 대부분이 서북부지역과 대전주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최근에는 서천군(15.2%), 당진군(13.1%), 태안군(12.5%), 금산군(10.0%), 서산시(9.0%)의 광공업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지방재정

- 2002년 현재 지방재정자립도는 28.4%로서 전국평균 54.6%에 훨씬 못 미치며, 전남북, 강원에 이어 전국 최하위임.
- 세입예산구조는 총예산(순계) 1조 8,006억원 중 자체수입이 31.4%, 의존재원이 65.3%, 지방채가 3.4%를 차지함.
-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체의 독자적인 연구개발투자지원 등 지역산업발전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표-6>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

(단위 : %)

시·도별	시·도별평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단체별 평균	54.6	79.8	34.6	47.5	19.1	46.0
서울	95.6	94.7	—	—	—	54.5
부산	69.5	66.1	—	—	40.9	39.6
대구	69.0	64.9	—	—	44.2	40.5
인천	74.2	73.1	—	—	22.8	39.3
광주	61.5	56.7	—	—	—	31.3
대전	73.5	69.3	—	—	—	32.9
울산	67.1	60.8	—	—	58.5	47.0
경기도	76.5	—	70.1	73.5	35.9	—
강원도	26.9	—	22.1	29.9	17.9	—
충청북도	32.8	—	26.1	43.8	21.2	—
충청남도	28.4	—	22.4	29.8	20.0	—
전라북도	26.3	—	17.5	32.1	15.4	—
전라남도	20.4	—	13.7	29.7	12.2	—
경북	30.0	—	23.3	33.7	18.1	—
경남	35.9	—	29.6	42.2	15.9	—
제주	33.8	—	30.4	34.5	20.0	—

주 : 1. 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분을 공제).
 2.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이 곤란함에 따라 총계규모로 산출.

3. 인적 자원

- 전문대학은 10개교로 공주시에 2개교, 천안시에 3개교, 홍성군에 2개교, 보령시, 청양군, 당진군에 각각 1개교씩 분포되어 있음. 2000년 현재 입학자수 13,996명, 졸업자수는 8,021명으로 취업률은 74.5%를 보이고 있음.
- 4년제 대학교의 경우 2000년 현재 19개교가 있으며, 그 중 천안시에 8개교, 연기군에 3개교, 논산시에 2개교, 공주시, 서산시, 아산시, 홍성군, 부여군에 각각 1개교씩 분포되어 있음. 19개교 835개의 학과에 입학자수는 30,585명, 졸업자는 13,851명임.
- 대학원 학과는 2000년 현재 총 51개가 있으며, 학생수는 석사과정이 5283명, 박사과정에 281명임.
- 충남지역의 대학 입학자, 졸업자,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2000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아직 50%대 수준에 머물러 전국평균에 비해 15% 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충남에는 현재 학교법인 기능대학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홍성기능대학이 있으며, 서북부지역 단지 중점개발과 기업체 증가로 인해 부족이 예상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아산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첨단직종 5개학과에 56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 또한 충남직업전문학교를 강경으로 이전하여 강경기능대학을 설립, 5개학과 400명을 목표로 2003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임. 강경기능대학이 완공되면 연 1,135명의 기능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규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신규노동력 공급능력은 2000년 현재 23,694명임. 이중 대학출신이 15,219명으로 64.2%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도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산업인력과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인력(군제대자)을 고려할 때 연간 25,000명 이상으로 추산됨.

4. 사회간접시설

1) 교통·물류시설

가. 도로시설

- 충남의 도로연장은 6,023km로 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로 등급별 전국의 총 도로연장과 비교하여 보면 고속도로가 3.9%인 78.5km, 일반국도는 9.6%인 1,190.8km, 지방도는 10.0%인 1,709.9km, 시·군도는 8.0%인 3,028.8km로 나타남.

<표-7> 시·도별 도로현황(1999. 12. 31. 기준)

시도별	연 장(km)	포 장(km)	미개통(km)	포장율(%)(미개통포함)	포장율(%)(미개통제외)	면 적(km ²)	도로밀도(km/km ²)
계	87,534	65,356	6,472	74.7	80.6	99,774.72	0.88
서울	8,036	7,069		88.0	88.0	606.37	13.25
부산	2,553	2,493		97.7	97.7	753.19	3.39
대구	1,979	1,933	10	97.6	98.1	885.53	2.24
인천	2,032	1,854	22	91.2	92.2	957.64	2.12
광주	1,805	1,158	645	64.2	99.8	501.15	3.60
대전	1,433	1,399		97.6	97.6	539.79	2.66
울산	2,166	1,361	772	62.8	97.6	1,055.72	2.05
경기	11,183	9,080	1,144	81.2	90.5	10,190.73	1.10
강원	7,842	5,347	118	68.2	69.2	16,873.72	0.46
충북	6,042	3,966	640	65.6	73.4	7,432.72	0.81
충남	6,023	4,359	223	72.4	75.1	8,584.76	0.70
전북	6,087	4,244	287	69.7	73.2	8,047.54	0.76
전남	7,998	5,868	391	73.4	77.1	11,963.79	0.67
경북	9,299	6,466	398	69.5	72.6	19,022.93	0.49
경남	10,474	6,694	1,720	63.9	76.5	10,513.25	1.00
제주	2,581	2,066	102	80.0	83.3	1,845.89	1.40

자료 : 건설교통부, 시도별 도로현황, 2000.

- 충청남도의 도로연장 중 시·군도 비율이 가장 많은 50.4%로 나타나 지역간 연결도로인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충남의 도로연장 밀도는 전국 0.88km/km²에 비해 낮은 0.70km/km²임. 인구와 면적을 감안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의 경우 전국이 1.27, 충청남도는 1.48로 전국에 비해 약간 상회한 정도이나 충남의 도로가 지역간 연결도로인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에 비해 시·군도의 도로연장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로의 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임.

나. 철도시설

- 충남의 철도연장은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충북선 등 4개 노선과 강경선, 남포선, 서천화력선 등 3개의 지선을 포함하여 7개 노선에 총연장 268.1km이며, 철도역은 경부선의 성환역~매포역, 호남선의 두계역~강경역, 그리고 장항선의 모산역~장항역 등 총 45개 역이 있고, 경부선과 호남선은 복선임.
- 경부 및 호남선은 복선철도이나 각각 도내의 동북단과 동남단에 치우쳐 있어 통과수송 위주로써 지역내 여객 및 물동량 수송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지며, 나머지 3개의 지선철도는 극히 일부지역만 접속하여 내륙지방의 철도여건이 미약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임.

<표-8> 철도시설 현황

(단위 : km, %)

노 선	구 간	연 장	비 고
전 국		3,124.7	-
충 남		268.1	-
전 국 대 비		8.6	-
경 부 선	성 환 ~ 매포	60.1	복 선
호 남 선	두 계 ~ 강 경	30.1	복 선
장 항 선	모 산 ~ 장 항	143.1	단 선
강 경 선	채 운 ~ 연무대	9.0	단 선
충 북 선	조치원 ~ 봉 양	4.4	단 선
서 천 화 력 선	간 치 ~ 동백정	17.1	단 선
남 포 선	남 포 ~ 옥 마	4.3	단 선

자료 : 대전지방철도청, 철도통계연보, 1999.

- 충남의 철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은 남북간 연결에 비하여 동서간의 간선 교통망 구축이 절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망이 전무한 상태이고, 충남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철도가 없어 지역간 접근성이 낮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심도시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는 여가문화의 발달을 가져와 향후 태안 해안국립공원, 안면도 국제관광지 등 충남 서해안권에 대한 관광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관광수요를 육상교통으로 처리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철도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다. 항만시설

- 충남의 항만시설은 보령항, 대산항, 장항항, 아산항, 태안항 등 무역항 5개소와 국내 연안을 오가는 화물선, 여객선, 어선의 입출항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연안항은 보령시 대천항과 서천군 비인항 2개소로 접안능력은 전국 항만(584선석)의 4.3%인 25선석이며, 하역능력은 전국 357,351천톤/년의 11.1%인 39,814천톤/년임.

<표-9> 항만시설 현황

구 분	항만지정일	항내수면적(km ²)	수심(m)	유속(N/S)	조위차(m)	접안능력	하역능력(천톤/년)	
무역항	계	-	439.70	-	-	-	25선석	39,814
	보령신항	'83. 8.30	47.00	14~28	1.4~2.0	7.8	2선석	9,715
	대산항	'91.10.14	62.00	11~40	3.2~4.4	9.2	16선석	21,735
	장항항	'68. 1. 4	1.10	2~9	1.6	7.0	2선석	660
	아산항	'86.12. 5	320.00	1~14	1.5	8.1	4선석	2,229
	태안항	'98. 2.24	9.60	18~19	3.0~4.0	5.2~7.0	1선석	5,475
연안항	계	-	8.43	-	-	-	465척	196
	대천항	'68. 1. 4	0.43	1~10	1.4~2.0	7.9	392척	196
	비인항	'68. 1. 4	8.00	18~19	2.0~8.0	7.1	73척	-

자료 : 충청남도 해양수산과, 2000.

- 그 동안 산업단지 및 발전소 전용항만 위주로 개발되어 일반화물처리를 위한 공용항만은 전무한 상태임.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단지가 조성된 대산항 및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 태안, 당진항은 유류 및 유연탄 전용항만으로 컨테이너, 철재 등을 위한 일반화물부두가 없어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물 등이 도로를 이용하여 외국 또는 타 지역으로 운송되고 있는 실정임.
- 충남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수도권외곽도로의 과밀로 인한 산업기능을 수용할 대안지로 부상되고 있음. 따라서 신산업지대 형성 및 대중국과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항만 건설이 시급한 실정임.

라. 물류시설

- 물류시설의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화물유통촉진법에 근거한 물류시설은 서천군 38개, 부여군 34개, 당진군 27개, 공주시 16개임.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물류시설은 아산시 26개, 당진군 19개, 홍성군과 예산군에 각각 10개씩 분포되어 있음.
- 보령시와 연기군에는 각각 1개씩 있으며, 보령시의 물류시설은 현대시멘트 대천공장으로 시멘트를 취급하며, 연기군 조치원에 있는 시설은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음.

2) 산업단지

- 충남의 국가산업단지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천안외국인전용단지, 대죽자원비축단지, 고정국가산업단지 등 6개가 있으며, 총 지정면적은 3,852만㎡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천안외국인전용공단, 고정국가산업단지를 등을 제외하고는 가동중인 업체는 전무한 상태임.
- 충남의 지방산업단지 및 기타 산업단지는 총 25개 단지에 3,367만㎡이며, 220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토론회

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이중 천안 제1산업단지를 비롯하여 9개의 지방산업단지와 계룡 왕대단지를 비롯한 4개 기타 산업단지에 203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으며, 성거산업단지, 천안 산업기술산업단지, 관창산업단지, 인주1산업단지 등 13개 지방산업단지가 조성 및 준비중에 있음.

- 지방산업단지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천안, 연기이며, 주요 업종은 기계·장비, 조립금속, 자동차트레일러, 석유화학 등임.
- 한편 농공단지는 15개 시·군에 총 58개소, 9,130천㎡에 605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그 중 48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음.
- 산업단지 수요는 북부지역의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등과 서남부지역인 보령, 서천, 그리고 대전근교인 연기에서 많이 나타남.

<표-10> 국가산업단지 현황

(단위 : 천㎡)

산업단지명	위치	규모	조성기간
계	6개소	38,518	
장항국가산업단지	서천 장항	14,712	1995~2001
아산국가산업단지	당진 고대·부곡	5,343	1992~2001
석문국가산업단지	당진 석문	12,084	1992~2001
천안외국인전용단지	천안 백석	714	1992~1999
대죽자원비축단지	서산 대산	909	1997~2002
고정국가산업단지	보령 구교	4,749	1992~2002

자료 : 충청남도 공업기술과, 2001

3) 광역용수 공급시설

- 기 존 : 대청광역상수도(북부지역), 금강광역상수도(남부지역)
 보령댐광역상수도(서해안), 아산공업용수도 I (서북부지역)
 - 건 설 중 : 대청광역상수도Ⅱ단계, 아산공업용수도Ⅱ단계사업
 - 확충계획 : 군장공업용수도,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 충남의 공업용수 사용량
- 261.2천톤/일(1999년)
 - 용수원별 : 공업용수도 109.5, 지방상수도 31.6, 지하·하천수 120.1천톤/일

- 충남의 공업용수 공급현황을 보면 시설용량은 292.5천톤/일에 비하여 용수사용량은 109.5천톤/일에 불과하여 시설용량은 충분함.
-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 서해안지역 개발에 따라 공업지역의 지속적 증가로 공업용수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5. 관광자원

1) 자연관광자원

- 충남에는 자연공원,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 자연경관자원이 풍부함. 자연공원으로는 계룡산 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비롯해 6개소가 있으며, 아산시 온천과 보령해수욕장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 계룡산, 대천해수욕장, 백마강,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 예당저수지, 안면도 송림휴양림 그리고 삼교호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관광 명소임.

<표-11> 자연관광자원 현황

구 분	관광자원
자연공원	계룡산, 태안해안국립공원, 덕산, 칠갑산, 대둔산도립공원, 고북저수지군립공원
지정관광지	대천해수욕장, 구두레, 신정호, 삼교호, 태조산, 예당저수지, 무창포, 덕산온천, 곰나루, 용연저수지, 각원사, 죽도, 안면도, 아산온천, 금강하구둑, 마곡사, 칠갑산도립공원, 천안온천, 마곡온천, 공주문화, 춘장대해수욕장

2) 역사문화관광자원

- 충남을 대표할만한 문화자원으로는 지정문화재인 아산 외암전통마을을 비롯하여 계룡산 도예촌, 추사 김정희 고택, 한산 모시마을, 맹사성 고택, 한용운선생 생가지, 이상재선생 생가, 김좌진장군 생가지가 있고, 천안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토론회

의 독립기념관, 국립공주박물관, 서산시의 해미읍성, 정림사지 5층석탑, 현충사, 마애삼존불, 관촉사, 칠백의총, 비암사 등 시군별로 문화자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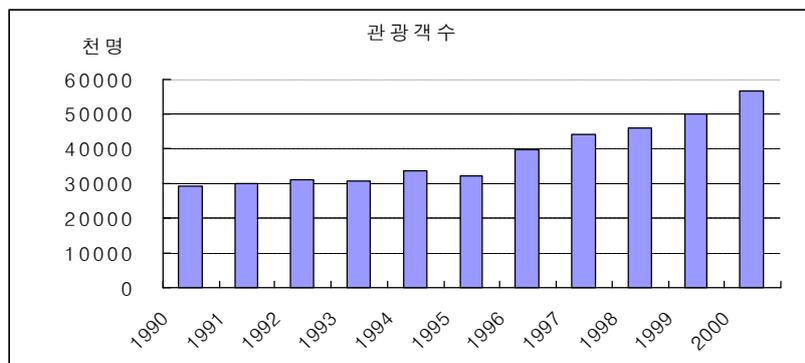
<표-12> 전통마을 현황

구 분	민속마을	소재지
지정문화재 전통마을	아산 외암마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기타 전통마을	계룡산 도예촌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추사 김정희 고택	예산군 산암면 용궁리
	한산 모시마을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맹사성 고택	아산시 배방면 중리
	김좌진장군 생가지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한용운선생 생가지	홍성군 성곡리
	이상재선생 생가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전통민속마을 관광상품화 방안, 1998.

- 충남의 관광객수 변화추이를 보면, 1990년 29,274천명에서 2000년 567,960천명으로 연평균 6.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4,173천명과 6,785천명이 늘어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현재 해수욕장 관광객수는 20,615천명으로 총 관광객수의 36.3%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령시가 27.4%, 태안군이 17.2%, 아산시가 12.0%로 세 지역에서 총 관광객수의 5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산군(9.7%), 공주시(6.0%), 서천군(5.7%) 순으로 나타남.

[그림-2] 충남의 관광객수 변화추이(1990~2000)



Ⅲ. 충남의 SWOT 분석

- 강점
 -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 기능의 최적의 대안지
 - 서해안 및 천안~논산고속도로 건설로 도약기반 확보
 - 환황해권시대의 대중국 산업생산기지
 - 관광문화시대에 백제문화 선양 가시화와 해양자원화 기회 도래
 - 대학 및 고급인력 증대
- 약점
 - 대전시 분리, 지역중심권 취약
 - 정주 및 도시기반 취약
 - 재정자립 및 금융환경 취약
- 기회 요인
 - 지방자치제의 성숙으로 발전 도약단계
 - 안면도 꽃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 이미지 제고(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관광산업 부흥효과)
 - 수도권기업의 이전입지수요 확대 및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 위협 요인
 - 지자체간 경쟁과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산업입지 확대(우리기업 1천개 유치)

IV. 충남의 산업발전비전

1. 환황해 경제권 부상과 충청남도의 입지 잠재력 증대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극동을 포함한 환황해 경제권이 세계의 주요 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에 있어서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는 전기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자동차, 철강 등의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산업과 석유화학, 철강산업, 비금속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대중국 생산거점지역으로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됨.
- 충청남도는 양호한 입지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거점항만 조성시 환황해 경제권의 주요 교류거점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계획은 오히려 경부축의 집중도를 또다시 강화시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비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는 공항·항만 등 물류기반시설이 취약한 충청남도의 성장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2. 3각 테크노밸리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 충남은 수도권 경제의 외연적 확대에 힘입어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아직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고 있는 혁신역량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발전비전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충남의 산업발전비전은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발전과 공간적으로는 3각 테크노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

한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북부권(천안~아산축)
 - 대학, 연구기관, 고급인력의 집적지로서 지역혁신의 거점도시
 - 지식기반 산업지구로 특화
 - 수도권기업 이전 및 신규창업수요 수용
 - 반도체, 영상 등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전자·정보산업 집적지, 자동차(부품)

- 서해안권(서해안고속도로)
 - 산업구조 고도화지구로 특화
 - 대중국 교역 및 산업거점
 - 철강, 석유·정밀화학, 기계 등

- 동·남부권(대덕연구단지근교축)
 - 첨단·벤처 산업지구로 특화
 -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국가적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대

- 동시에 IT, BT 등 신산업과 농림수산업 등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선진 농·림·축·수산업을 지향함.

3. 고속 간선교통·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국토중심지 기능 강화

- 충남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중심기능 및 산업기능 수용의 최적지로 부상할 것임.
- 국가 간선교통망 중간 결절지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국내 지역간 교통·물류·유통기능의 입지 잠재력이 증대되고, 수도권의 산업 및 경제기능의

대안적 입지 장소로서 역할이 증대될 것임.

-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전철 등의 국가기간교통망 건설에 따라 역사 주변, 고속도로 IC 인근 등의 개발잠재력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4. 문화·환경가치 증대에 따라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전원적 정주공간 수요증대

-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제근무제 등 환경변화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충남지역의 국내외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충남은 풍부한 자연환경 및 해양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충청남도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문화, 경관, 자연자원을 토대로 개성적인 지방문화와 첨단기술을 갖춘 쾌적한 전원형 정주공간으로서 매력이 증대될 것임.

V. 기업유치전략

1. 산업창출의 지역구상 - 기업이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에 부응 -

- 지자체는 내생적으로 혹은 외생적으로 지역산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음.
-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돕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필요함.

-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발전은 말 그대로 산업창출의 지역 구상의 핵심이지만 단시일 내에 내생적 지역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 정도임. 이런 점에서 볼 때 내생적 지역산업발전정책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수도권에 비해 입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외생적 지역산업발전정책은 당연한 것이며 지속되어야 함.
- 기업활동의 글러벌화에 따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서 기업이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유치전략은 더욱더 중요함.
-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산업정책이나 입지정책은 지역산업정책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또 지역산업정책은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지자체는 당해지역에 입지한 기업이 지역의 代表企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AS 등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지자체는 외국인투자유치사업단을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함.
- 동 사업단은 레드카펫사업 등을 추진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외국기업 유치를 극대화함.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불문하고 기업의 입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단의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함(경기도).

2.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간의 집적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혁신을 최대한 창출·확산·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시·도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음.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토론회

- 이는 국가산업정책의 지역산업정책으로의 중심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그러면 내생적 지역산업정책의 핵심인 충남의 지역혁신체제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우선 충남의 전략산업으로는 산업발전 정도와 성장 잠재력을 종합해 볼 때 전자·정보기기산업이 핵심임. 그밖에 자동차, 정밀 기기, 생물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충남의 전자·정보기기산업은 경기도와 구미에 이은 새로운 산업 집적지로서 서해안 시대를 리드할 전략산업임.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무선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부품 및 장비업체 그리고 천안의 문화복합단지과 연계된 영상미디어기기 분야를 집중 육성함.
- 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 기업지원서비스기관이 집적 및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해야 함.
- 기업, 대학, 연구소가 광역적으로 연계되며, 지역별로는 2~4개의 전략산업이 집중 육성됨.
- 전자·정보단지 조성 및 디스플레이 산업지원센터, 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센터,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등 3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국내외 기업의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임(예 : 송도 테크노파크에 cGMP건립으로 외국 BT기업의 입주 촉진).
- 연구개발 투자지원 확대 필요
- 경남도청은 매년 30억원을 지원하여 메카트로닉스, BT분야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발하였음.

3. 자유무역지역 및 외국인전용단지 지정 신청

- 외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특히 자유무역지역은 국고로부터 토지구입, 표준공장건설, 세제 혜택 등 가장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므로 충남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보다도 우선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장항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은 군산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광역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설득력을 더할 것임(경제자유구역의 차별화).
- 자유무역지역은 3개의 기존지역과 대불산단 신규지정,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등 확대일로에 있음.
- 충남의 경우는 석문단지와 장항단지를 예상 후보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임(평택항은 인천항을 보완하며, 새로운 서해안 산업벨트화에 대비하여 정비·확충되어야 함).
 -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성 제고, 향후 서해안시대 교류 거점으로 당진~서산은 신산업지대 개발축으로 설정함.
-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을 매년 1개씩 추가 지정할 예정이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과 연계하는 지역별 투자유치전략을 검토하고 있음.
 - 나아가 정부는 조세·입지 혜택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투자지원제도를 개편하여 고용보조금이나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소위 '캐시 그랜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지자체들은 이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2002년에 91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9.4%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지속

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도 기존의 천안, 광주 평동, 목포 대불, 경남 진사, 구미, 오창 이외에 매년 2~3개씩 신규 지정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므로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함.

4.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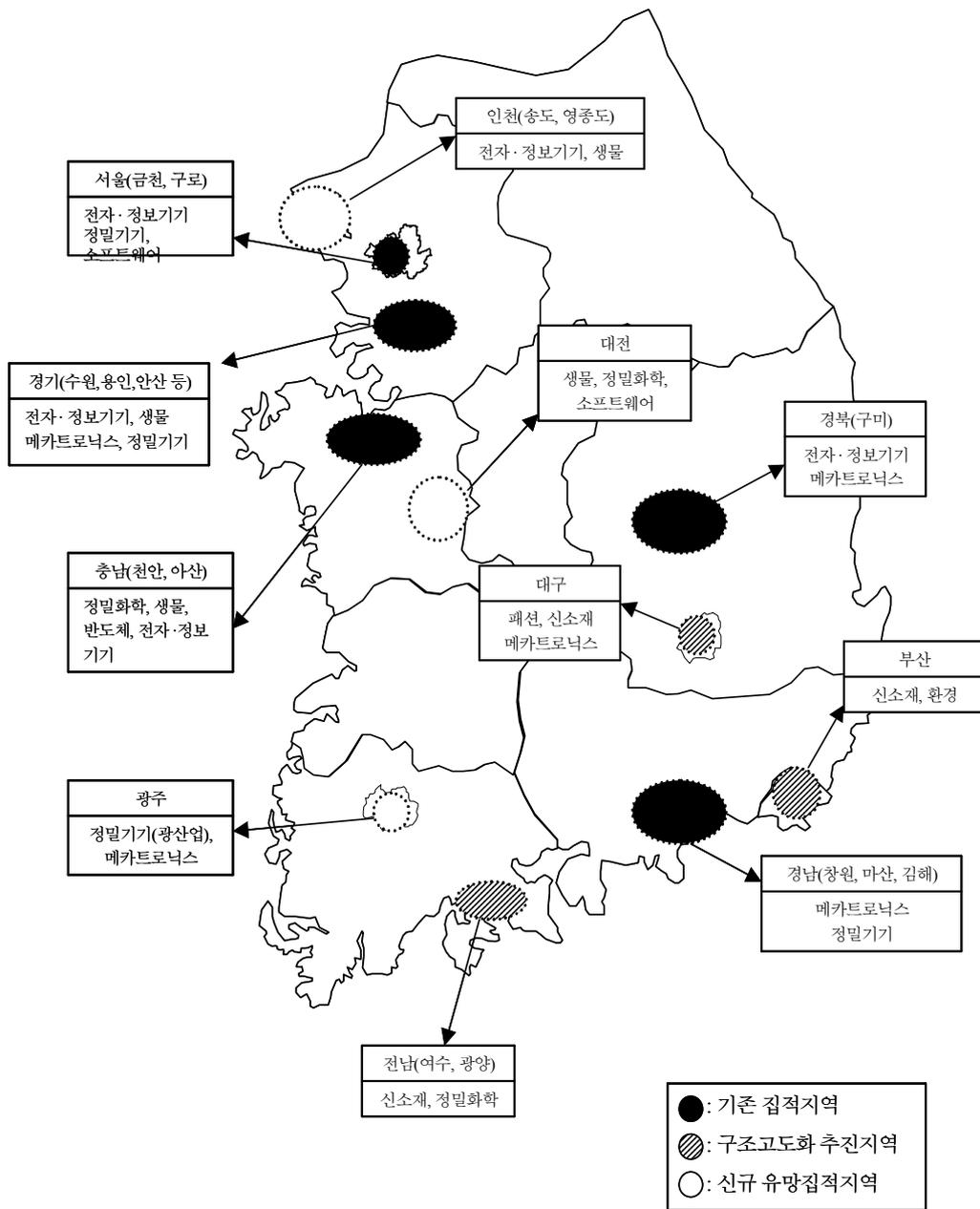
-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촉진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임.
 - 지식기반산업은 지리적 집적을 통해 다양한 외부경제효과를 누림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때문임.
- 그러나 지식기반제조업 전반의 집적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시책은 취약한 상태임.
- 즉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 문화산업 등 개별산업 중심의 단지조성 시책은 존재하나 지식기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집적촉진시책은 없음.
 - 지식기반산업은 산업간 융합 현상이 두드러지고 산업간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 지식기반산업은 혁신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산업환경 정비가 매우 중요함.
 - 기존의 산업단지만으로는 지식기반제조업의 집적 강화에 한계가 있음.
-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집적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므로 지자체는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우선은 지식기반산업의 기존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집적지구 지정될 예정이다.
 - 기존 산업단지, 도시내 및 주변에 산재한 개별입지 기업, 혁신센터·테크노파크 등 혁신관련 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을 포괄하여 지구로 지정함.
 - 기본적으로 기존 집적지역의 구조고도화 차원에서 접근함.
 - 동시에 지역간 중복이나 과당경쟁을 조정하고 집적지간 연계를 강화함.
- 신규 유망 집적지역은 산업 및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육성 지원함.
- 지원사업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혁신환경의 정비, 기반시설의 확충,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연관기업의 집적 장애요인 해소, 기업활동 규제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둠.
- 집적지구 지정방안
 - 지정 기준 :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정도, 대학·연구소·기반시설의 구축 정도, 지자체의 집적지구 진흥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지정 절차 : 시·도지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 지정 신청 → 지정 심의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산자부장관 지정
 - 대상지역 선정 : 지식기반산업·연구개발클러스터·기업지원클러스터의 형성지표를 고려하여 지식기반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가능성이 높은 지역 선정(가능한 한 기존의 산업집적지역을 활용)
 - 충남의 경우는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가능성

○ 집적지구의 관리 및 운영

- 집적지구 독자의 상설 관리기구는 두지 않음.
- 집적지구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함.
- 집적지구내 관련 기관중 적합한 주체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함.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예상지역(예) >



5. 노사무분규 보장 선언

- 지자체는 기업을 '왕으로 · 평생고객으로' 받들어 모셔야 함.
 - 기업을 존중하는 산업문화가 지역에서 보여야 기업이 마음놓고 이전할 수 있음. 그래야 국가발전,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함.
- 기업존중, 기업유치 산업문화에 있어서의 핵심은 노사안정을 보장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노사무분규를 보장하는 지자체가 나옴직 한데 아직도 소식이 없음. 지자체 장에게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벤처정신이 필요한 때임.
 - 충남도나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勞使 無紛糾, 無規制'를 보증하는 선언을 하면 어떤지.
- 일본은 물론 유럽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노사분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함.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비교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 문제해결이 필수적임.
 - 노사무분규 보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현안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며,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함.
- 중앙정부는 그 대신 이것을 실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이전보조금 지원, 종업원 이주비 지원, 투자비 지원, 토지구입비 지원 등).
 - 특히 종업원 대책은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신규기업의 종업원 유치에 매우 중요함.
 - 2000~2002.8월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266건에 불과함.
-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러바마주에 자동차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각종 투자인센티브가 아니라 노사무분규 보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6. 지역산업 CEO 양성 및 유치

- 지난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스포츠 CEO 히딩크는 우리의 꿈을 선수와 함께 이루어주었고,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실제 눈으로 보여주었음.
- 전문 CEO는 스포츠나 민간 비즈니스 분야만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지역산업진흥이나 기업유치 사업에도 필수적임.
 - 최근 정부가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경영자가 절대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성공시켜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프로젝트 CEO나 기업유치 전문가를 외국에서 유치하거나 국내의 관련자를 외국에 연수시켜 양성해야 함.
 - 특히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산업발전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자 중앙의 각 부처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이 분야의 CEO 공급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역산업발전 관련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혁신센터, 사업화지원센터, 진흥센터, 창업보육센터, 소프트타운, 벤처프라자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함.
- 문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엄청나지만 이를 운영할 전문경영자가 많지 않다는 데에 있음.
- 지역의 각종 혁신센터는 기업을 유치·견인하는 앵커기능을 담당하므로 이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제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이끌고 나갈 유능한 인재를 찾고 키우는 데 지자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 인재를 유치하고 키우는 것이 혁신센터 10개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

7. RDA(지역산업총괄조정기구) 설립 추진

-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과당경쟁이 초래된 인상임(RRC, TIC, TP 외에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각종 센터가 설립되어 전국의 센터화가 진행).
- 이러한 지역산업진흥 관련 시책들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이들 정책집행과 운영의 규모 및 범위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지역별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함.
- 이러한 전담기구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서 산자부는 현재 'R&D 기획평가진(클러스터진흥계획단)'을 구성하여 산업기술지도 작성,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D/B 구축사업 등을 추진 중임.
- 하지만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한정되어 지역산업정책 수립,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외국인 투자유치 등 지역산업육성 및 통상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가 힘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산업총괄조정기구'의 설립이 바람직함.
 -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지역개발기구'를 설립·운영중임.
- 한편 지역산업에 대한 부처간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협의체가 필요하고 산자부가 이것을 총괄함.
 - 영국의 경우 중앙부처간 지역협의체 GO(government offices)를 설립·운영하고 지역개발기구와 긴밀한 협력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함.
 - 동 기구의 설립·운영에 핵심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RDA를 받아들여려는 마음자세가 절대적으로 필

요함. 다시 말하면 중앙 및 지방공무원과 지역산업총괄조정기구간의 협력이 필요함.

- RDA는 공무원의 스피드와 유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8. 사업·생활 환경 개선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은 우리나라의 지경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지로 만들고 동시에 세계적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동북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하드인프라(물류, 생활 인프라 등)와 소프트 인프라(정보, 제도, 정책, 노동, 인력, 언어, 문화, 관습 등)가 갖추어져야 함.
- 마찬가지로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 인프라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특히 중요한 것이 교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생활여건과 사업자 서비스 등 사업 환경임.
 -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을 보육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원세트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외국인을 위한 전용주택, 쇼핑센터, 스포츠·레저·관광시설, 문화공간도 구비되어야 함.
 - 이는 문화, 종교, 관습 등의 측면에서 異文化를 수용하는 열린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임.
 - 외국기업의 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나라를 마다하고 싱가포르나 홍콩, 중국 등으

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임.

- 한편 금융, 무역, 법률, 회계, 컨설팅, 광고, 디자인 등 비즈니스서비스업도 지원되어야 함.
- 산업단지나 주거단지 등의 하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타지역과 차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 지자체는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가칭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9. 지역산업균형발전 보조금제도의 도입¹³⁾

-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주된 요인이 제조업 발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지만 낙후지역으로의 기업입지에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산업낙후지역에서의 제조업체 신설이나 이전은 매우 부진함.
- 그간 정부의 산업낙후지역 지원시책은 대부분 SOC 확충 등과 같은 하드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낙후지역 입지에 따른 기업의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효과는 미흡함.
-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낙후지역의 경제적 와해를 방지하고 국가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지역개발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WTO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서도 낙후지역에서의 보조금 지급은 허용되고 있음.
- 따라서 더 나은 산업집적지역에 입지하고자 하는 기업 본래의 성향을 상쇄하고 낙후지역으로의 기업이전과 신설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보조금(가칭)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요

13) 조세, 금융 등 거시경제 환경개선은 중앙정부가 담당

구하여 산업자원부가 시행토록 함.

- 산업낙후지역에의 기업 입지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공여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선정지표 및 선정방법을 적용하여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원지역을 결정함.
- 정부정책과 기업경영 목표간의 상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신규 고용과 프로젝트 투자비용의 일정 비율 중 기업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채택함.
- 보조금의 재원은 지역산업과 관련된 예산 및 산자부의 소관자금 중 추가 확보가 가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조달하거나, 설치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